

| 취임사 |

선도적 연구로 신뢰받는 공공기관 정책 수립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원희 소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제3대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으로 부임하는 이원희입니다.

대학에서 공기업론과 재무행정론을 강의하여 왔고, 또 공기업 경영평가에 참여한 경험으로 센터의 업무에 친숙하지만, 앞선 소장님들의 업적에 비추어 걱정과 기대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1894년 갑오경장이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기 위한 개혁이었다면, 120년이 지난 청마년에 다시 우리 사회의 개혁을 이끌기 위한 역동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공공기관의 개혁이 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한국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끌어 왔던 공공기관들이 시장경제가 성숙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역할의 재정립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방만 경영과 과도한 부채로 인해 국민의 불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업무수행방식과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공공기관연구센터는 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한편 선도적인 연구를 통해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관련 다양한 정보의 DB 구축을 통해 역사적 맥락과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공공기관을 이해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공공기관, 전문가, 국민 사이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연구와 자문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센터는 아직 규모와 인력 면에서는 크지 않은 조직이나, 구성원들의 열성과 성실 그리고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Contents

KIPF 공공기관 뉴스레터 2014. 01

I 이슈 & Talk

- 공공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방안 05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감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관한 의견 13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균형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II 전문가의 눈

- 네트워크 산업과 경쟁체제 도입 23
이원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의 가치 25
하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공기업 부채 문제를 보는 시각의 전환 27
최경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III 기관장 인터뷰

- 대한민국 유일의 주택보증 전담 공공기관 32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
-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 39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IV 현장의 소리

- 산업현장의 '깨진 유리창' 을 살펴보자 47
백낙문 안전보건공단 기획이사
- 중소기업 산업교육의 산실, 중소기업연수원 49
이은성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장
-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공공기관 부채, 해결책은? 51
김영우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혁신본부장
-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다 54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공급운영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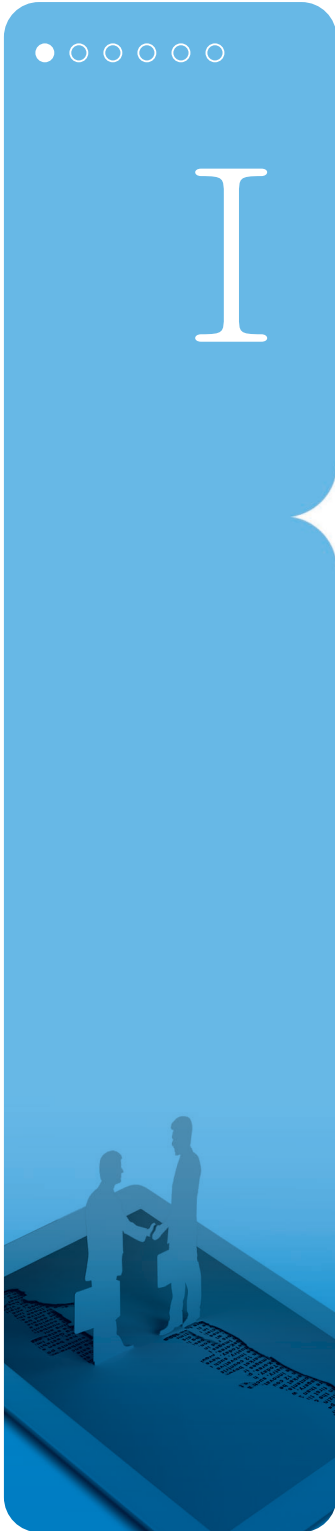
V 좋은 사례 나누기

- 기관 특성에 맞는 출자 관리 모델 정립 58
한국동서발전
- 글로벌 파트너링을 통한 중소기업 협력사업 추진 6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공항 지식기반 R&D경영을 통한 공항핵심장비 국산화개발 66
인천국제공항공사

VI 특 집

- International SOE Policy Conference 개최 71





이슈 & Talk

■ 공공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방안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감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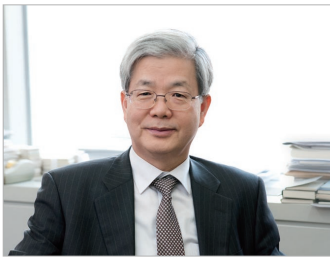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균형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 이슈&Talk는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좌담회입니다. <편집자 주>



공공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방안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감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 일 시 : 2013년 11월 29일
- 사 회 : 허경선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참석자 : 장지인(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정대길(삼정 KPMG 회계법인 전무이사)
김홍기(부산항만공사 재무회계팀 차장)
- 정 리 : 유승현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 차 례
 1. 공공기관 회계투명성의 현황 및 평가
 2. 공공기관 회계투명성의 문제점 및 이슈
 -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3. 공공기관 회계투명성의 발전방향

1_ 공공기관 회계투명성의 현황 및 평가



허경선(사회자)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사회자

IMF 금융위기 이후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회계투명성이 낮아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인해 자본조달비용이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유치가 저조하여 이는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투명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기관 회계투명성의 현황을 진단해보고, 문제점과 이슈를 도출함으로써 공공기관 회계투명성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기관 회계투명성의 전반적인 평가와 회계투명성이 중요한 이유부터 들어 보겠습니다.

장지인

공공기관의 회계투명성은 경영평가, 공공요금의 산정, 부채관리, 사업투자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낮으면 경영평가 및 공공요금 산정과 부채관리 등에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상장된 공기업이나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해외자본조달시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하며, 해외주식 시장에 상장된 한전과 같은 공기업의 기업가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공공기관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감사제도 도입, 감사위원회제도 및 통합경영공시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2011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공공기관에 IFRS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지배구조(특히, 상임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가 취약하고 태생적으로 감사위험이 낮아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효성이 떨어지고 여전히 회계투명성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의 결산감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극히 일부 공기업만이 대상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기관에는 외부감사에 대한 감리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회계오류수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에서 회계투명성에 대한 지적과 지속적인 비판이 계속되는 실정입니다.

정대길

공공기관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으

로 우리나라 공공기관 회계투명성의 수준은 낮은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 신인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분야의 정책사업과 고유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의 경영성과, 재무적 성과 등을 주주인 정부와 국민,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적시에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흥기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이익 유연화의 요인이 없다고 할지라도 회계투명성 측면에서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며, 공기업의 분식회계 논란이 있을 경우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회계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항만공사 내부적으로는 가능한 보수적인 방향으로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타 공기업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예측됩니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부분은 공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 판단됩니다.

사회자

공공기관의 회계투명성을 민간기업과 비교한다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장지인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에 비해 회계정보의



장지인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수요자, 내부 감시기구의 전문성, 외부감사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어 민간에 비해 회계투명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유용성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집단(투자자, 채권자 등)이 자본시장에 다수 존재하고 독립성있는 감사인 선임을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유인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 이외에 재무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이용자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감사인의 독립성과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에 있어서도 민간기업의 경우 내부 감시기구뿐만 아니라, 주주, 채권자, 투자자 등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은 대부분 전문성이 부족한 비상임이사(감사위원회 포함)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수요가 극히 한정되어 있고 감사위험이 낮은 이유로 감사 품질이 높은 감사인의 선임보다는 감사수수료가 낮은 감사인을 선임할 유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자유

수입제하에서는 감사 품질 경쟁보다는 감사 수입료 경쟁이 우선시되어 궁극적으로 내부 지배구조가 취약한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회계투명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정대길

민간 상장기업의 경우, 회계투명성과 관련하여 주주, 채권자 등의 관심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내부 감시기구의 역할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반면,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가 주주이고 민간기업과 같이 유동성 악화에 따른 부도, 법정관리 등의 상황으로 주주, 채권자의 피해가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계투명성에 대한 관심과 제도 구축이 활성화되기 힘든 구조라고 판단됩니다. 공공기관 회계투명성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일부 공공기관의 감사보고서에 표시된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을 표본 조사한 결과, 민간기업에 비하여 규모·질적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투명한 재무제표 공시에 정부의 관심과 내부적인 원인 파악, 향후 대책 제시 등의 노력이 없어 내외부적으로 공공기관의 회계투명성은 사각지대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김흥기

공공기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공기업은 비상장공기업으로 시장에서 발생한 이익을 통해서만 주주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부서뿐만 아니라 공공기

관의 입장에서는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보수적으로 현상을 인식하고 이는 회계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공기업의 보수적인 회계처리 성향이 오히려 민간기업보다 높은 회계투명성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공기업의 문제는 재무건전성에서 기인된 것으로 봅니다. 공기업은 수익사업뿐만 아니라, 비수익성 사업에 해당하는 국가 기반시설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구분회계를 확대하여 부채를 원인별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재무건전성 강화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공공기관 회계투명성의 문제점 및 이슈

사회자

공공기관의 회계투명성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내부적 측면과 외부적 측면(외부회계감사)에서 어떠한 문제점과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을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장지인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일찍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운법 시행 이후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운용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회계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경영진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IFRS 도입 이후 내부적으로 많은 회계전문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기관 외부적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의 감사 위험이 낮기 때문에 수수료 과당경쟁을 통해 수입료 덤핑을 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자유수입제하에서 외부 감사수요가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이로 인해 감사 투입시간이 줄어들어 감사 품질 저하가 발생하여 궁극적으로는 회계투명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타난 여러 공기업의 회계 불투명성 사례는 이러한 낮은 감사수입료로 인한 형식적인 외부감사제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대길

기관 내부적으로 공공기관 경영진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이 부족하고 담당임원과 부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배려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내부 감시장치에 해당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외부감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방식(자유수입 또는 지정방식)과 선임과정(외부감사 보수에 의한 자유경쟁입찰 방식, 가격과 기술평가를 동시에 고려한 입찰방식, 제안서에 의한 서면결정, 제안 설명회를 추



정대길

삼성 KPMG 회계법인 전문이사

가한 결정 등), 외부감사인의 투입시간과 보수 등을 알리오에 공개하여 부실 재무제표 작성 및 부실 감사에 대한 예방과 사후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외부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노력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흥기

기관 내부적으로는 회계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다양한 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회계 관련 인력도 민간기업 수준으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사 위험이 낮기 때문에 동일한 규모의 민간기업과 비교할 때 감사보수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감사보수의 감소는 감사투입시간의 제한으로 인한 감사품질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보수를 현실화하고 공기업에서도 회계감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공공기관의 실무담당자로서 공사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소개와 함께 기관의 애로사항 및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정보공시 측면과 회계제도적 측면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흥기

부산항만공사는 설립 이후 9년 연속 흑자기업으로 회계투명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연도에는 기존 감사보수를 현실화하여 감사투입시간을 늘렸고, 감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구분회계제도 도입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거쳐 회계투명성 및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보공시 측면에서 공기업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고 정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시간적으로 촉박한 것이 현실입니다. 1월 말에는 모든 회계감사가 종료되어야 2월 중순까지 이사회 승인을 받아 2월 말까지 정부 결산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하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국제회계기준이 포괄적인 기준이지만 공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예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결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회사의 결산재무정보가 공사의 결산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지만, 자회사의 인력 및 회계시스템에 비추어 볼 때 힘든 상황인 것도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3_ 공공기관 회계투명성의 발전방향

사회자

공공기관의 회계투명성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감사보수가 낮으며, 이로 인해 감사의 품질이 떨어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회계투명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앞으로 공공기관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장지인

기관 내부적 측면에서 첫째, 내부통제를 책임지고 있는 상임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여전히 회계나 재무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대규모 공기업에 도입된 감사위원회제도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회계전문가 1인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하여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원칙중심의 IFRS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회계전문가를 보강해야 합니다. 셋째, 경영진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춘 CEO가 임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부 회계감사 측면에서는 현행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인 자유수임제를 지정제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수임제의 본래 취지인 감사 품질 경쟁보다는 수수료 경쟁을 초래하여 감사 품질이 오히려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보수의 현실화를 통해 저가수임을 차단하고 감사품질 유지를 위해 공공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최소)감사투입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감사계약 시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당 표준 감사보수액을 정하고 저가수임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감사인,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을 공시하여 감사수수료 덩핑이나 낮은 감사보수에 대한 외부감사가 작동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리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감사원 결산검사제도는 일부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공공기관의 회계감독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비상장 공공기관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고, 감리 결과 위반혐의가 통보된 회사에 대해 감사원에서 정밀감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대길

일부 공공기관에서 재무제표 주석에 파생상품의 투자손실 내역을 기재한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을 위험회피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거래하여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주인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해당 부처가 다양하므로 이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통하여 부처별 해당



김홍기

부산항만공사 재무회계팀 차장

공공기관의 경영실적과 재무구조, 수익구조 등 재무제표 공시의 투명성을 관리, 감독하고 공공기관 감리담당 부서와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를 통하여 주주로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기

실무자로서 판단할 때 공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간 1회 수준에서 당기부터 연간 2회(반기 및 기말)를 반영하는 것은 정보의 적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기말 정보입력 시에는 연결 및 개별 재무정보를 모두 입력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적절히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강화하면서 감사결과를 기존의 재무정보와 함께 알리오에 공시하며, 회계감사에 대한 계약 체결시에는 독립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직원을 위한 회계 업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알리오 등

공기업 경영실적이 공시됨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구분회계제도를 통해 회계정보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회자

이번 논의를 통해 공공기관 회계투명성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회계투명성 현황과 문제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발전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기관담당자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공공기관의 회계투명성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관한 의견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균형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 일 시 : 2013년 12월 27일
- 사 회 : 박 진 前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 참석자 : 김 철(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장창훈(한국토지주택공사 기획조정실 차장)
최창규(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정 리 : 유승현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 차 례
 1.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
 2. 공공기관 부채절감 대책에 대한 평가
 3. 공공기관 방만경영 대책에 대한 평가
 4.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
 5. 정부에 바라는 점

1_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



박 진(사회자)
前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사회자

2012년 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원으로 2008년 대비 1.7배로 급증하였고, 최근에는 원전 납품비리, 고용세습 등 방만경영 사례가 계속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12월 11일 정부는 부채절감 및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정상화 대책에는 부채 및 복리후생과 관련된 정보공개 강화, 구분회계 도입 및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공공기관 복리후생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대책이 담겨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제대로 ‘메스’를 들이대는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기 위한 선언적 내용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채 및 방만경영 대책에 대한 평가, 향후 추진계

획에 대한 의견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준협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을 어느정도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지만 공공기관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먼저 방만경영과 부채 급증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인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방지책이 빠져 있어 향후에도 공기업 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비전문가가 기관장으로 낙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내·외부 감시기능에 대한 강화방안도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이 감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방향성은 좋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체질 개선에는 기득권의 반발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주도적으로 견인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김철

공공기관 정상화는 지금까지 공공기관이 비정상이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어떻게, 왜 비정상이었는지 공공기관에 대한 진단부터 명확히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근절

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예산 및 경영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다시 방만경영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채관리 강화 대책 이전에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부분이 정부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관료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엄격한 조치를 통해 앞으로 공공기관의 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창규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부채 및 방만경영에 대한 심각성은 모두 인식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고 방만경영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건전한 재정을 갖출 수 있는 정책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장창훈

2012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공기업 부채는 지방 공기업까지 합하면 566조원으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지방정부 채무) 443조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한 빚이 많은 12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부담한 이자는 하루 평균 214억원에 달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공



최창규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기관 부채가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잠재적인 국가 신용등급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공공기관 부채 감축 등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물론, 부채를 줄이고 방만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부분이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정부에서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기관의 입장을 이해하고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2. 공공기관 부채절감 대책에 대한 평가

사회자

공공기관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채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은 12개 기관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구분회계를 도입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준협

자율성을 키워주되 결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 공공기관 운영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부채감축을 위한 방안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해당 공공기관의 자구책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TF)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인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구분회계제도를 통해 어떤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했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원인별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부채가 발생하는 원인은 경영진의 경영능력 부족, 정부의 국책사업, 낮은 공공요금 등 크게 3가지로 각 원인별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1회성 조치가 아니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

해서는 12개 대상기관을 선정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국책사업의 전가로 부채가 급증한 기관의 경우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명한 선정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최창규

공공기관의 부채문제는 몇 개의 공공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부채감축을 시행함으로써 정부의 부채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부채는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무분별한 국책사업을 통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정상화 대책이 자칫 우리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그러나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 철

현재 상황에서 단시일 내에 공공기관 자구책만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는 실질적으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거시적 방안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부채관리 강화대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경우, 대상기관이 12개라는 점에서 부채관리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여 실효성을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구분회계제도의 경우,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합니다. 지금 도입하더라도 이번 정부 후반기가

되어서야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춰질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한 대안으로는 부족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채가 급증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이번 정상화 대책은 정부정책 사업과 기관 고유사업의 구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의 내실화를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부채과다 기관의 자산매각 활성화는 자칫 공공기관의 민영화 단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부채 감축을 명분으로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장창훈

구분회계를 실시하면 어떤 사업에서 부채가 많이 발생하며, 수익이 나는지 판단이 가능하며 정부 정책에 의한 부채와 경영부실에 의한 부채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공공기관은 정부정책에 의한 손실 발생 시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정부에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체 사업의 비효율적 운영을 통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사업별 구분회계제도는 결산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일정한 배분기준에 의한 것으로 사업별 손익발생의 객관적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별로 예산과 결산을 구분하고 각 사업별 사내거래를 통해 완전한 구분회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부제 형태의 구분회계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_ 공공기관 방만경영 대책에 대한 평가

사회자

정부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개선하고 경영평가를 강화하는 등 20개 기관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방만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협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공기관이 국민정서에 반할 만큼 과도한 복리후생을 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에 고급인력이 집중되는 현상도 국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을 점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년연장이 법제화되면서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모범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에게 더 많이 봉사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금체계가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채 중점관리기관 선정과 같이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선정 역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창규

과거 공공기관 노조들의 무리한 요구에 의



장창훈
한국토지주택공사 기획조정실 차장

해 실시되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들 중 사회 통념상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철

물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개선되어야 하지만,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제시하는 공공기관의 8대 방만경영 유형·사례가 과연 대표적인 사례이고 최우선 해결과제인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복리후생비를 삭감하더라도 한해 수백억원 절감에 그친다는 점에서 부채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경영평가 강화방안으로 보수관리 평가지표를 과도한 보수·복리후생 조정 노력, 성과 등을 집중 점검하는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지표로 바꾸고 평가비중을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사안을 모두 포함시킴으로써 평가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설립목적상

의 고유사업 수행보다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에 더욱 전념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리후생과 관련된 단체협약 체결 시 기관장이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파업에 대해서는 기관장에게 책임추궁을 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는 노동조합을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창훈

공공기관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보다 적은 인력과 비용으로 국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공기관 임직원만을 위한 과도한 복리후생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복리후생에 대한 개선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면 이는 1인당 복리후생비 지출현황 등 좀 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

사회자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 및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협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을 바라보면서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관과 사람

이 추진계획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주무부처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시민 단체를 포함한 민간 전문가를 별도의 독립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공공기관 정상화 과정을 소신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창규

향후 기관별로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이 확정되면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국민들이 진척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정상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 대부분의 이해와 동의하에 진행되어야만 추진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공공기관 정상화의 당위성에 대한 설득을 위해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등의 협조를 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김 철

정상화 대책의 추진체계로서 이전과 달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정상화 대책을 책임지는 기구인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의 구성에서 공운위원이 배제되고 기재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 사실상 관료 TF라 할 수 있습니다. 공운위 역시 정부의 중요한 정책안건을 큰 저항없이 받아들이며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과 비상임이



김 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사 결정과 관련하여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통한 여과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운법에 명시된 대로 공운위에 노동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운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진방식도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와 지침 전달 위주이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공론화가 부족합니다. 추진일정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시기별 실행계획을 분기별로 제시하기 전에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에서 제출했던 실행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상황이 크게 바뀐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에 대한 점검없이 정상화 대책을 제시한 것에서 추진일정과 실행계획을 신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장창훈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추진체계는 공공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주무부처는 소속기관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통하여 정상화 이행현황을 총괄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로 보입니다. 주무부처와 기재부의 명확한 업무분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부처를 상대로 각종 회의참석 및 자료제출 등의 요구가 공공기관에 주어질 경우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5_ 정부에 바라는 점

사회자

학계 전문가, 연구자, 공공기관의 실무담당자로서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에 바라는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협

첫째, 개혁 의지가 없는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강력하게 시행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면 국민의 신뢰를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동력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둘째, 국민대표의 감사 과정 참여 등과 같은 내·외부 감시기능 강화방안을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소통의 리더십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균형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국

책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Pay-Go 원칙을 법제화하거나 주요 사업별 부채영향평가를 도입 및 강화하는 방안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최창규

공공기관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치권에서 발생하는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실효성있는 정책수립 및 실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로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철


저 역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대책이 빠진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부채 급증은 정부정책 수행에 따른 부담을 공공기관에 전가했기 때문이며 여기에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주효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는 정상화 대책을 통해 통제, 관리 강화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 개혁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공공기관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비

릇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창훈

공공기관의 부채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경영도 원인이 되겠지만,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과 이를 기회로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목표가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정부는 수익성이 부족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공공기관 역시 부채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사업은 자체적인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여 사업 초기단계에서 손익관리를 통한 부채 관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이번 논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절감과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공공기관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 정부가 해 주어야 할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에 맞게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II

전문가의 눈

■ 네트워크 산업과 경쟁체제 도입

이원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의 가치

하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공기업 부채 문제를 보는 시각의 전환

최경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전문가의 눈**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공공기관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칼럼입니다. 각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네트워크 산업과 경쟁체제 도입

상하 분리는 정부의 불개입이 아니라 더욱 정교한 조정 기능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책 설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상하 분리체제는 더 큰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원희 소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한국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은 한국 경제 발전의 속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통신 속도와 부가서비스의 발전은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KT와 SK 등 통신사는 경쟁적으로 우리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는 KT가 과거 한국통신으로서 국영기업에서 출발하여 2002년에 완전한 민간사업자로 변모하였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한다. 초기에 많은 자본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통신 기간망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선도적인 투자를 하였다. 그러나 시설이 구축되고 나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는 경쟁체제가 필요하고 또 민간의 경영 기법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의 경제 발전 단계와 맞물려 있는 과제이다.

시장이 성숙되기 이전의 정부 역할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보면 대규모의 투

자가 요구되는 네트워크 산업은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으로서 전형적인 시장 실패 영역이었고,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영역이었다는 것이 전통 경제학의 논거이었다. 첫째,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로 인해 독점을 유도한다. 따라서 시장에 의한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거대한 매출비용으로 인해 생산이 없더라도 비용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진입장벽이 발생한다. 이는 시장지배력을 유도하게 되며, 독점 민간기업의 횡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셋째,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시민 생활에 불가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공급 방식이나 가격 설정과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다. 이로 인해 정부의 개입이 강하게 남아 있다. 특히 수직적 결합이 강하게 지배하였다.

따라서 과거 네트워크 산업(network utility)은 이용의 형평성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운영하

나 정부의 요금 규제, 보편적 서비스 등의 강력한 규제가 지배하고 있었다. 전기, 통신, 상하수도, 천연가스 그리고 운송수단이 그러하였다. 공공의 복리를 위해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산업은 시장의 실패 분야이고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던 것이다.

상하분리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

그러나 산업화가 진전되고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된 상황에서 네트워크 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과 이를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는 기능을 구분하여 역할 분담을 하려는 시도가 그러하다. 이에 수직이나 수평 분리가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 독점의 양식이 아니라 소유권을 분리하고 이를 통해 경쟁적인 요소를 추출하는 것이다. 예컨대 전력의 경우 생산과 배분을 분리하여 발전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통신의 경우 국제전화와 장거리와 시내전화를 구분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특히 다양한 부가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천연가스도 LPG 상태의 공급과 소매 공급을 구분하고 경쟁체제의 도입을 활성화하고 있다. 철도에서도 선로, 신호 등 고정시설의 관리와 철도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구분하여 경쟁체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노선별 승객, 화물, 산업용 물질 등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에 분리(unbundling)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상하 분리는 인프라 구축은 정부가 담

당하지만 운영과 유지관리는 경쟁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시장의 규모와 밀도(market size and density)와 관련이 있다.

물론 네트워크 산업에서 상하 분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즉 네트워크 관련 시설 자체가 어느 정도 성숙된 경제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상하 분리는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개발도상국에는 권고하기 어려운 정책 수단이라고 평가된다.

더욱 정교한 정부의 조정 기능은 필요

이러한 경쟁체제의 도입은 정부의 규제를 대신한다. 규제 대신 시장의 질서에 의해 운영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상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교차보조도 필요하고, 서비스의 접점을 관리하는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즉 완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적절한 정부의 개입에 의한 분리된 서비스 간에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상하 분리는 정부의 불개입이 아니라 더욱 정교한 조정 기능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책 설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상하 분리체계는 더 큰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의 동등경쟁 기반(equal footing) 구축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향상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의 가치

공공기관들이 방만경영 정상화를 통해 먼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작은 기회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세정 부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새해 벽두부터 공공기관 정상화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정부가 2년차를 맞아 야심차게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으로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기관 정상화의 주된 내용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이다. 부채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그 원인이 어느 정도 공공기관의 통제 밖에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겠지만, 정부도 약속한 정책패키지를 통해 부채문제 해결을 도와야 한다는 점에 수긍할 것이다. 하지만, 방만경영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들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방만경영을 조장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결국 그러한 관례의 맹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하여 혜택을 누리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에 대부분의 책임이 있다.

2013년 말 기획재정부의 조사에서 국민들의 눈높이로 볼 때 충격적인 방만경영 사례들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보고되었다. 방만항복리후생 중에는 과도한 휴가, 경조사비, 교육비, 퇴직금뿐만 아니라, 고용세습처럼 민간부문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혜택들이 버젓이 존재한다. 업무 중 순직자를 위한 유가족 특별채용이라고는 하나, 이미 사망 시의 경조금 또한 과다지급되고 있는 곳이 많아 혜택이 이중삼중으로 남발되고 있는 셈이다. 민간부문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동료인 공무원과 비교해도 형평성 면에서 지나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를 반영하듯,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에도 공공기관 직원들의 과도한 복지 수준을 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 필요

물론 공공기관들이 혁신의 노력 없이 방만 경영만 일삼아 왔던 것은 아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공공기관 경영 우수사례들을 홍보하고 있는데, 매해 경영혁신의 모범사례들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또한, 경영정보시스템과 경영평가제도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도 많이 이루어 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다양한 경영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올해 30살이 되는 경영평가제도는 경영 효율성을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어,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이런 제도들이 있음에도, 시간, 재정, 인력 등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공공기관들을 완벽하게 감독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기재부의 조사 결과처럼 여전히 방만경영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제도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는 만큼,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밖에 없다.

또한, 방만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보다 큰 당면과제인 부채감축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공공기관에게 부채문제는 현 정부의 정책과제로서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뀐다 해도 해결 시까지 여론의 지속적인 압박을 받게 될 부담이다. 그런데, 부채문제에 비하면, 심각성도 낮고, 해결방안도 명료하기에 사뭇

작은 문제로 보이지만, 방만경영 해소는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시발점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비록 공공기관들이 부채 해소를 위한 자구안을 마련한다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요금인상 등과 같은 대책이 요구되는데, 국민들의 동의 없이는 모두 불가능한 일이다. 공공기관들이 방만경영 정상화를 통해 먼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낼 작은 기회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방만경영 문제에 발목을 잡힐 경우,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공론 형성은커녕, 언급조차 하기 힘든 상태가 될 수 있음을 공공기관들이 잊지 않기를 희망한다. 



공기업 부채 문제를 보는 시각의 전환

국민펀드 공모 방식과 같은 여론수렴의 기능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 등을 모색하여, 비용을 낮추는 것과 함께
필요한 프로젝트와 불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간접평가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최경규 교수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우리나라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해 493조원에 달하고 올해는 5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근 공공기관 개혁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2013년 국가예산이 342조원, 2014년 예산안이 358조원이며, 2012년 GDP가 약 1,200조원임을 감안하면,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207.5%로 자본잠식 상태인데다 높은 부채 증가율은 부채수준이 위험수위에 달했음을 경고한다.

이처럼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원인은 정부의 국책사업을 공기업이 이행하여 증가한 사업비, 해외자원개발정책에 따른 과도한 해외투자, 공공요금 동결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임금과 성과급 지급 등 방만경영을 하여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한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공기업 부채 관리를 위한 다양한 모색 필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공기업 부채관리에 있어서 신규사업 억제나 전기요금 인상 등의 직관적인 방법 외에도 다양한 접근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기업 부채관리를 위하여 현재의 부채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부채의 금융비용을 낮추는 접근법을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제시하는 방안이 유일하거나 이상적인 해법은 아니지만,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시도로서 발상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기본적으로 부채는 대규모가 일시에 발생하여 장기간 지속되는 반면, 수익은 소규모이고 단기적이어서 부채와 수익의 규모와 기간의 미스매치가 불가피하다. 이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것이 부채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갑자기 수익의 규모를 키우거나 기간을 늘리기는 어려우므로 기존 부채의 만기 시 비용을 줄이고, 신규 부채의 금융비용을 낮추는 접근이 필요하다.

펀드 조성 후 일반에 리파이낸싱

첫째, 현재의 부채를 줄이는 방법으로 저금리의 차환을 위한 국민펀드를 만들고 이 펀드가 공기업의 채권을 사오고 이를 공모형태로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하면 부채의 절대 규모를 줄이지는 못하지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서울시의 지하철 9호선 국민펀드는 그 사례로서 서울시는 맥쿼리가 운영하던 9호선에 대한 투자를 다른 펀드를 내세워 리파이낸싱하였다. 이로써 민영으로 운영되던 9호선을 서울시가 운영권을 찾아오기 위해 그 자금을 시장에서 펀드 형태로 조달하여 금리를 낮추었다. 이러한 인프라펀드는 부동산을 소유경영하기도 하지만 공공적인 부동산을 소유경영하는 공기업에 투자를 하여 채권자로서 간접적으로 수익을 내기도 한다.

그간 공기업은 조달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개인들에게 쪼개어 팔기 어려운 면이 있기도 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여 기관투자자나 은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 따라서 공기업이 발행하는 정부가 보증하는 양질의 채권에 개인들이 투자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기존 부채의 금리 자체가 현재 시장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리파이낸싱 시에 투자가는

기존 채권자보다 낮은 수익률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이러한 공기업 등에 채권형태로 투자할 기회가 없었던 개인들은 은행이나 기관 투자가보다 낮은 금리에 만족할 수 있다.

특정 프로젝트 펀드, 국민펀드로 공모

둘째, 공기업의 신규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에 펀드가 투자하는 방안이다. 프로젝트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특정 프로젝트 펀드를 국민펀드의 형태로 공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우수한 신용을 가진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대규모의 자금을 반복적으로 소수의 은행이나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차입함에 있어서 신용한도에 가까워지거나 한도를 초과할 수 있으나, 펀드를 통한 다수의 개인들로부터의 차입은 그 차입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상 단일 아이টে에 자산이 집중되는 것을 기피하는데, 정부 보증이 명시적이지 않다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들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는 반면, 채권자를 다변화한 국민펀드를 통한 개인들로부터의 차입은 금융비용의 감소효과가 있게 된다.

이때 펀드공모나 프로젝트의 실패에 대한 비용은 펀드, 정부, 공기업이 함께 분담하도록 계약이 되어야 한다.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국민펀드 공모는 대국민 여론을 묻는 효과가 있다. 즉,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호의적인 여론이 형성되면 펀드공모가 수월한 반면, 비판적인 여론이 높다면 펀드공모는 어렵게 될 확률이 크다. 이때 공식적으로 위험

을 분담하는 정부는 간접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국민의 피드백 받는 절차와 시스템 개요

셋째, 공공기관의 대규모 프로젝트 실행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나 공기업이 실행하는 정책 혹은 사업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비용이 조달되며, 채권발행이나 펀드공모를 한다고 하여도 결국 그 보증채무를 정부가 지게 되므로 최종책임의 주체는 정부이다. 따라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혹은 공기를 통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Notice-and-Comment in Rulemaking’이라는 제도를 통해 행정부가 정부기관(government agency)을 통해 행하는 규제나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입법부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가 이를 집행하며, 이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하여, 삼권분립에 의해 견제하고 있다. 그러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산업화와 함께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헌법에 정해지지 않은 행정부의 정책결정권이나 규제권한이 강화되었다. 입법부가 행정부에 규칙제정권(rulemaking authority)을 위임하는 경우, 1946년 「Administrative Procedure Act」(APA)와 법원의 해석에 의하면 행정부

나 정부기관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규칙을 만드는 경우, 입법부에서의 법률제정 절차와 유사하게 행정부나 정부기관에서 지켜야 할 절차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즉, 행정부나 정부기관에서 비자의적이고 변덕스럽지 않은(not arbitrary, nor capricious) 규칙을 만들기 위해, ‘Notice-and-Comment in Rulemaking’에 따라 국민들에게 충분한 기간 Notice를 주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Comments를 받아 이에 대해 답변하고, 이 답변을 문서화하여 규칙제정을 위한 합리적 근거로서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규칙제정 절차는 ‘transmission belt theory’에 의해(자동차의 트랜스미션 벨트에 의해 힘이 전달되는 것처럼) 국민의 모니터링 권한이 규제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에 전달되고, 사후에 법원의 해석에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행정부 혹은 정부기관의 규칙제정(rulemaking)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공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수행에도 적용하여 신규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Notice를 주고 Comments를 받는 과정을 규정하여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적인 평가를 거친 대형 프로젝트는 결과뿐만 아니라 실행과정에서도 국민들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서 정책과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웹사이트(www.usaspending.gov)는 모범적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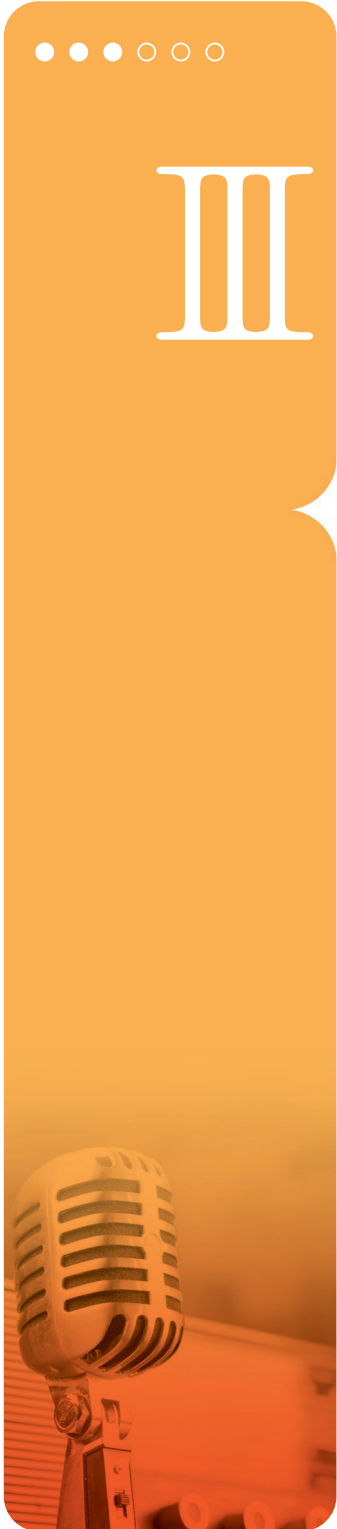
를 제시한다. 이 사이트에는 연방정부 및 각 연방정부기관별로 사업과 계약관계에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민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여, 정책과 사업의 실행과정의 중간평가 단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러한 오픈시스템을 통해 연방정부 부처별, 정부기관별 책임성을 강화하고, 후에 투표를 통해 대통령의 임명권 및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후평가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국민과 관계자들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의 감독을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주채권은행’과 같은 권한을 주어 채권발행 심사, 투자사업 타당성 심층검토 등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공운위가 그러한 권한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기 쉽고, 한정된 인력으로 수많은 공공기관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 미국의 www.usaspending.gov와 같이 정부에서 행하는 정책과 사업의 정보가 공유되고 국민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개별 프로젝트별로 이해관계자어나 전문가들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효율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이야말로 적어도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출과 관련한 민

주적 절차의 모니터링의 시작이며, 공공기관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또한 위에 제안한 국민펀드 공모 방식과 같은 여론수렴의 기능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 등을 모색하여, 비용을 낮추는 것과 함께 필요한 프로젝트와 불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간접평가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기관장 인터뷰

- 대한민국 유일의 주택보증 전담 공공기관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
-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 기관장 인터뷰는 각 기관의 주요 활동과 현황, 미래 비전을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대한민국 유일의
주택보증 전담 공공기관으로,
국민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

* 정리: 나진희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 김선규 사장 ·

• 학 력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명지대학교 경영학 학사
덕수상업고등학교

• 경 력

現, 대한주택보증(주) 사장 (2012)
현대도시개발 대표이사 (2009~2010)
현대건설 영업본부 본부장, 부사장 (2006~2009)
현대건설 관리본부 본부장, 전무 (2004~2006)

주택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만큼 이번 인터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클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우선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한주택보증은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균형 있는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3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유일의 주택보증

전담 공공기관입니다. 주택의 분양에서 매입, 임대, 하자보수, 주택금융에 이르기까지 주택사업의 모든 단계의 보증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부의 주택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 40만세대의 분양보증과 300만세대의 하자보수보증 등 총 600조원의 보증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

“

주택사업의 모든 단계의 보증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부의 주택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행하여 왔으며, 특히 건설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전국 32만세대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증을 이행하여 분양계약자의 주거안정을 지켜드렸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의 고유 사업인 주택분양보증은 주택건설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공사를 계속하여 입주를 보장해 주거나, 분양계약자가 낸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입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도 하자보증이행을 통해 신속한 보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와 철학을 공유하여 부동산 대책의 효과적인 실행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대책 지원의 성공적인 수행을 지원하고 경색된 주택시장에 자금 유동성을 공급하는 PF(Project Financing)보증, P-CBO(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매입 등의 정책사업을 통해 어려운 주택시장에 구원투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임하신 지 이제 1년 10개월 정도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장으로서 어떠한 경

영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또 그간의 성과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1월 대한주택보증 사장으로 취임하여 어느새 2년이 가까워져 갑니다. 서민주거안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의 CEO로 취임하면서 국가와 사회에 좋은 일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해 왔습니다.

‘창조경영, 현장경영, 윤리경영’이라는 3대 경영방침 아래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모든 임직원이 합심하여 아낌없는 노력을 해왔고, 머릿속으로만 구상하던 대한주택보증의 모습이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대한주택보증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혁신과 변화를 거듭해나갈 것입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역할 확장, 주택업계 지원 강화 요구, 시장개방 등 경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역량 강화와 강력한 조직문화를 구축을 목표로 Strong·Speed·Smart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대한주택보증은 지속발전이 가능한 강한(Strong) 기업으로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조직구조 개선과 인력 확충, 지식공유, 업무시스템 선진화 등 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고객서비스와 업무처리는 더욱 Speed 해야 합니다. 세계 일류의 기업과 동일한 경쟁선상에 놓아져도 뒤지지 않는 선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중심의 마인드를 제고하고 있



“

직원들의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운동을 위해
Strong · Speed · Smart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습니다.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Smart 경영입니다. Smart경영은 말 그대로 ‘똑똑하게 일하는 가치창조형 경영’을 말합니다. 대한주택보증에는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그렇듯 워크하드(Work Hard) 문화가 관행으로 남아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 민간기업에서 근무할 때 당연히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워크하드 대신에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고 일과시간 이후에는 가족과 함께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는 가족중심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주택보증은 기존 ‘워크하드’ 문화에서 탈피해 보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성원의 만족감과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스마트경영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관행이나 업무를 축소하는 워크 다이어트(Work Diet)를 실시하고, 회의문화 개선과 대면보고 축소, 집중근로시간제 운영 등 일하는 방식도 스마트하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PC-Off 제도를 도입해 불필요한

야근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실정과 조직문화를 고려한 맞춤형 스마트경영과 가족친화 경영활동은 직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이러한 노력들이 바탕이 되어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10년 연속 무분규, 2년 연속 무교섭 임단협을 체결이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기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는 가지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8개의 신상품 출시와 53조원의 보증공급, 신용평가 AAA, 당기순이익 1,800억원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6개 신상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했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주택정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고객은 행복한 직원이 만듭니다. 직원들이 행복감과 자부심을 느끼는 직장으로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혁신을 거듭할 생각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서민생활안정과 관련하여 주택과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한주택보증의 역할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의 7.24 「4.1부동산대책 후속조치」와 「8.28 전월세 대책」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에서는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유도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모기지보증, 임차료지급보

증 등의 신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정부와 협의를 통해 상품개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신규 보증상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업계 및 금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품기본구조 및 운영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주택사업자가 원활하게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입니다.

모기지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경우 우리 회사가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저리의 자금을 조달할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그밖에도 후분양대출보증, 임대주택PF보증, 임차료지급보증, 임대매입자금보증 등을 운영하여 임대주택공급 확대와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민주거복지 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공적 역할 확대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전월세 안정대책과 관련한 여러 보증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대한주택보증의 신상품 출시로 인해 기관에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요.

정부는 유례없는 전월세난과 좀처럼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1993년 설립 이후 주택관련 보증을 전담해 온 대한주택보증은 주택보증 분야의 노하우와 높은 안정성을 인정받아 정부정책 신규보증을 통해 주택시장에 신용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와 철학을 공유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후분양대출보증’, ‘모기지보증’,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등의 정책보증 신상품과 ‘임대주택PF보증’, ‘임차료지급보증’ 등의 임대시장 활성화 보증상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후분양대출보증 등은 임차인 전세보증금 보호를 통한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미분양주택 임대활용 촉진과 과잉공급물량 해소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나오게 된 계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택시장 패러다임의 변화와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라 주택시장이 냉각되면서 구매수요보다는 임차수요가 급증한 점 등을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

정부정책 효과 발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과 홍보마케팅 강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를 상회하는 주택보급률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적 변화 등, 주택시장 변화와 임대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는 여러 사회적 요인들이 맞물려 있는 시장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새로운 주택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신규 건설부문에 대비하여 임대부문의 신용 보완이나 금융서비스가 뒷받침되지 못했던 이유로 전월세시장의 불안이 야기되었지만 정책적 보완과 정책수행기관들의 노력을 통해 점차 전월세시장이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정책지원 상품들이 시장에 정착하여 정부정책의 효과가 발휘되고, 서민주거안정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 마케팅도 강화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하신 전월세 대책관련 상품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증에 따른 위험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대한주택보증은 보증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발생가능한 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상품 개발 시 수많은 변수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상품구조를 수립하고, 사전적 리스크 분석에서 사후적 리스크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설계합니다.

보증료를 역시 이러한 리스크 분석을 거쳐 산출한 것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보증상품인 만큼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수립하였습니다. 대한주택보증에서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책 관련 보증상품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부 주택정책의 성공적인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회사의 리스크 관리는 단계별로 정교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 공신력과 신뢰성이 가장 높고, 지난 20년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이용하시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주택보증에서는 현재 정부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 예정되어 있는 민영화와 관련하여 민영화 이후에도 관련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민영화와 관련된 기관의 대비와 계획들이 궁금합니다.

민영화는 앞으로의 정부의 방침대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대한주택보증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적 역할을 민간부문이

모두 부담하기에는 그 비중과 부담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2010년 5월 정부는 대한주택보증의 공적 역할 지속 필요성과 매각가치 저하 우려 등으로 회사의 민영화 계획을 2015년 이후로 연기하였습니다. 보증시장 개방과 민영화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보증기피 보완방안이 마련된 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기업가치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민영화 전략을 세워 추진하는 등 보증시장 개방과 민영화를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택보증제도 해외수출과 관련하여 성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외수출과 관련하여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주택보증제도 해외수출이란 우리나라의 선분양 제도하에서 분양계약자들의 안전한 입주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택보증제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주택 대량공급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가 주택보증제도를 기반으로 단기간에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듯 개도국에서도 유용한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파키스탄·UAE 등 14개 주요 개도국대사를 초청한 「주택보증제도 해외수출포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2개국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

주택보증제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주택대량공급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 전파하여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니다. 지난 9월에는 베트남 건설부 차관 일행을 한국으로 초청해 대한주택보증 보증제도 연수프로그램도 제공하였으며, 베트남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자문과 기타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보증기관과 교류 협력을 위해 지난 7월 국제주택보증협회(IHHWA) 회원으로 가입하여 글로벌 보증기관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한 우리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13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2013 국제 주택금융·보증제도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제세미나에는 캐나다, 영국, 일본, 네덜란드 등 국제주택보증협회(IHHWA) 회원기관과 국제기구(OECD, EMF, Habitat)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으로서 대한주택보증이나아갈 방향이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은 지역사회와 국민경제에 뿌리를 두고 성장해가는 만큼 경제적 영역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주택보증은 국민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정부정책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설



립된 공기업인 만큼 사회적 책임의 성실한 이행을 가장 중요한 경영목표 중 하나로 삼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보증제도를 운영하는 대한주택보증의 업(業) 그 자체로도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주택업계 유동성 지원, 사회형평적 고용 확대, 중소기업 지원, 동반성장 및 공정사회 구현 등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폭 넓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주거복지 향상이라는 회사 설립목적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국가유공자 임차자금지원, 저소득층 주택임차자금 지원,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해비타트 후원, 사회복지 생활시설 개보수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주거소외계층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보훈처장 표창과 주거복지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돈 버는 기업 10년 가고 존경받는 기업 100년 간다’는 말이 있듯, 저희 대한주택보증 임직원은 사회적 책임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

건전한 저작권 생태환경 구축과
저작권 창조경제를 통한
문화융성에 기여하는
저작권위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 정리: 나진희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 유병한 위원장 ·

• 학 력

미국 인디애나주립대학교(BLOOMINGTON) Law School(LLM) 석사 (2003)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률학과 수료 (1983)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1981)

• 경 력

現,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2011)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2009)
문화부 대변인 (2008)
문화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운영단장 (2007)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실 교육문화행정관 (2006)
문화부 체육국 스포츠여가산업과장 (2005)
문화부 영상음반과장, 영화진흥과장 등 (1996)



먼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기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위원회의 설립 목적인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목표로 「저작권법」 제113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기관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저희 위원회는 저작물 등록, 저작권 사용료의 심의, 저작권 분쟁에 대한 조정 등 저작권 이용환경의 기반을 마련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저작권에 대한 일반인 및 청소년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저작권 교육 및 홍보활동, K-POP, 드라마, 영화 등 우리 콘텐츠의 해외 불법복제에 대한 저작권 보호활동, 저작물들이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저작권 유통 인프라 구축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만료저작물이나 공공저작물 등의 공유저작물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환경으로 급변하면서 클라우드, SNS, N-SCREEN 등으로 저작물 이용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앱스토어, SNS 플랫폼 등으로 저작물 유통 플랫폼이 변화함에 따라 관련 산업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 이용 환경 변화에 따라 저희 위원회는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 지원, 스마트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 연구,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단속지원 등 저작권 생태계를 위협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이용환경 기반 마련업무와 저작권 교육 및 홍보, 저작권 보호활동, 저작권 유통 인프라 구축 활동 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

예전보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하는 저작권이나 저작권 산업, 저작권법, 공정이용 등 저작권과 관련된 개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창작자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작권이라는 권리의 발생입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은 출원을 하고 심사를 거쳐서 등록이 되어야만 권리가 발생하지만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블로그에 글을 썼다고 하면 글을 쓰고 저장한 순간 블로그에 올린 글은 저작권이 부여된 저작물이 됩니다. 별도로 저작물을 등록을 해야 한다거나 저작권 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음악이나 글, 사진 등의 저작물들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작권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있는 글

“
스마트 환경 변화로 인해
저작물의 이용이 증가할수록 그 입지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들은 이미 저작권이 부여된 저작물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하게 되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다 보니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사용을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저작물의 이용자와 생산자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디지털 저작물 이용환경에서 강력한 저작권의 보호는 저작권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공정한 이용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해 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공정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서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키마우스>, 일본의 <헬로키티>, 우리나라의 <뽀로로>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캐릭터일 것입니다. 이러한 저작권 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얼마나 큰 부가가치를 갖는지는 해리포터 총매출액과 국내반도체 수출액을 비교해 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해리포터의 총매출액은 308조원인 반면 국내반도체 수출액을

291조원으로 해리포터의 매출액이 국내 반도체 수출액보다 17조원이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표적인 캐릭터인 미키마우스는 연간 6조원의 매출을, 우리나라의 대표 캐릭터인 뽀로로는 연간 6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캐릭터 저작권을 통한 로열티 수입만 보아도 저작권 산업에 내재된 부가가치와 향후 성장성을 짐작할 수 있으며, 스마트 환경 변화로 인해 저작물의 이용이 증가할수록 그 입지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GDP 측면에서도 2011년 전체 저작권 산업의 부가가치는 121조 8,420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GDP의 9.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금융보험업(6.31%)이나 건설업(5.32%)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전체 저작권산업의 GDP 비중을 국가별로 비교해보아도, 우리나라 전체 저작권산업의 GDP 비중은 9.86%로 미국(11.1%), 호주(10.3%) 등의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저작권 산업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2011년 7월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간 위원회의 기관장으로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운영하셨는지, 그간의 성과와 함께 소개하여 주시지요.

저작권은 문화산업의 핵심이며 저작권이 중심이 될 때, 비로소 문화융성을 위한 기틀이 다져질 수 있습니다. 무수한 콘텐츠로 이



루어진 저작권 생태계에서 ‘킹핀(king pin)’은 저작권이기 때문입니다. 콘텐츠는 나무, 플랫폼은 강물에 비유했을 때 별목한 나무를 강물에 띄워 이송할 때 병목현상에 봉착하면 킹핀을 움직여서 해결하듯이 저작권은 저작물 관련 생태계의 중축이 되어 나침반 역할을 하는 킹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끄러운 플랫폼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가 적재적소에 공급되는 저작권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소통과 상생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산업이 핵심이 되어 창조 에너지를 콘텐츠에 녹여내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나침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임기 동안 위원회는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스마트 디지털 시대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 창작-유통-소비-확대 재생산이라는 저작권 선순환 체계 구축과 창작자-사업자-소비자 간 상생을 통한 문화융성 구현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 저작권보호를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문화예술인 등 창작인 환경 개선을 통한 저작권 창작기반 강화와 함께 점차 복잡해지

는 갈등 해소를 위한 조정자 역할도 수행해온 바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 재창출을 위한 효과적 창조 자원화, 저작권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유통 인프라 서비스 구축, 산업적인 기여 강화를 위한 저작권 통계집 제작 등 산업으로의 역할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성장하는 한류산업의 흐름에 발맞추어 해외에서 우리 저작물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대우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해외 합법유통 지원을 통한 한류저작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의 두 축이 균형감 있게 상생하는 저작권 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와의 MOU 체결 등을 통해 한류 저작물 합법이용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고 유럽연합의 전자도서관 프로젝트인 ‘유로피아나’와 ‘공유마당’ 사이트를 연계하여 서적, 음원,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공유 저작물의 제공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밖에 최근 저작권 산업은 ‘SW, 방송, 음악, 디자인’ 등 그 범위가 매우 넓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하면서 다른 산업들과 융합하여 클라우드, N-Screen 등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저작권 산업의 규모는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급변하는 저작권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원회에서는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저작권 동향 및 저작권 산업에 대한

통계정보 등을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활용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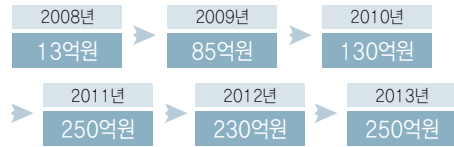
저작권 침해는 국내에서 외국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발생하지만, 최근 한류나 K-POP 등이 수출되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회에서는 '해외저작권 지키미 프로젝트'를 통해, 주요 한류지역(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에 해외저작권센터를 개설·운영함으로써 현지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및 구제조치, 컨설팅 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창조기업의 지원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류 확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업계의 실질적인 수익으로 직결되기 위해서는 침해 대응에만 치중하기보다는 합법유통질서 확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한류의 세계적인 확산과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시장규모 확대 가능성이 크지만 불법 저작물 유통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침해에 대한 조속한 대응과 동시에 합법유통으로의 전환에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일례로, 위원회 중국 북경사무소 지원을 통해 체결한 한국 방송사와 중국 현지 지역 방송국과의 방송저작물에 대한 합법유통계약과 위원회 태국 방콕 사무소와 현지 미디어

※ 한국 콘텐츠업계 합법유통 지원을 통한 수익 (추정)



※ 한국영화, 드라마 및 예능프로그램,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중국 유통 권리인증 지원 등 총 1,651개 저작물 권리인증 유통지원 ('13년 11월말 기준)

그룹과의 온라인 합법유통계약 체결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합법유통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권리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위원회 중국사무소와 중국 최대 통신기업인 차이나모바일(China Mobile), 중국 내 한국 유통사(아이원, 중국명 북경첸이명전자상무유한공사 대표 최진호)와의 지속적인 3자간 협의를 통해 기존 여러 복잡한 증명자료를 위원회에서 발급하는 권리인증서로 대체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권리인증서 발급을 통해 2013년 9월 1일부터 한국 가온차트(Gaon Chart) 음원을 차이나모바일에서 정식 유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분야 국제협력에 있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개도국 대상의 핵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과 반한류 해소를 위하여 수평적 파트너십 관계와 쌍방향 문화교류를 기반으로 한 대상별 맞춤형 저작권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개도국 저작권 관계자 대상 공적



개발원조(ODA)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각국의 고위 저작권정책 결정권자들을 대상으로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WIPO STUDY VISIT 프로그램', 실무자급을 대상으로 약 6개월간 진행하는 '문화동반자 프로그램', 저작권 집행 분야 인력에 특화된 연수인 '국제저작권보호인력개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해외에서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노력을 위해 단계적인 한국 콘텐츠 수출업계의 정당한 수익 보호, 잠재된 한류 콘텐츠 시장개척 기회 발굴·제공 및 개도국 저작권 법·제도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등 한류가 세계적 문화현상으로 정착되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K-pop 등 신한류 확산에 따른 해외 우리 저작권 보호 필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대내·외적인 저작권 환경변화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원회의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및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위원회의 대내외적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위원회는 창작자와 유통사업자,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시장중립자적인 상생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한 중립자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갈등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작자와 이용자 간 균형점을 모색

“

건전한 저작권 생태환경 구축과 저작권 창조경제를 통해 문화융성에 기여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함으로써 수익이 환류되는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지방에서의 저작권 경쟁력 강화와 창작자에게 가치가 환류될 수 있는 창조자원화 사업 등의 신규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이윤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상생의 저작권 생태환경 구축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분야는 상상력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조경제 구현 기반의 중요한 분야입니다. 저작권 산업구조를 창조적이고 선순환적인 생태구조로 전환하고, ICT·문화예술 등과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며, 한류저작물의 글로벌 창조경제권역을 확대하는 등 저작권 창조경제를 통해 문화융성에 기여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속적인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차질없이 사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과 관련된 제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공공기관 부채 발생 및 방만 경영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슈가 제시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국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 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의 필요성 역시 공감하고 있으며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정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저희 위원회는 지방이전TF를 구축하여 위원회가 지방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서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심의, 분쟁조정, 등록, 임치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고도화함으로써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저희 위원회를 이용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경영투명화 방침에 따라 예산 뿐만 아니라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상황을 홈페이지 및 알리오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정부방침을 적극 준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창조경제를 통한 문화융성’이라는 정부 시책에 발맞추어 국민 여러분께 저작권 관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기관으로서 주어진 목표에 200% 달성하는 것을 임무라고 생각하고 임직원 모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IV

현장의 소리

- 산업현장의 '깨진 유리창' 을 살펴보자
백낙문 안전보건공단 기획이사
- 중소기업 산업교육의 산실, 중소기업연수원
이은성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장
-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공공기관 부채, 해결책은?
김영우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혁신본부장
-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다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공급운영처장



* **현장의 소리**는 각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실상과 문제점,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칼럼입니다. 각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산업현장의 ‘깨진 유리창’ 을 살펴보자



백낙문

안전보건공단 기획이사
(cskim@lx.or.kr)

도 심 골목에 위치한 가게의 유리창이 깨졌다. 가게 주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오가던 사람들은 깨진 유리창을 보고 문을 닫은 가게라고 생각했다. 가게엔 손님의 발길이 뜸해졌고, 깨진 유리창 여기 저기엔 낙서가 생겨났다. 심지어 가게에 도둑이 들기도 했다. 가게 주변은 점점 우범지대가 됐고, 사람들은 그곳을 피해 결국 그 가게는 문을 닫고 말았다.

이른바 ‘깨진 유리창’ 이론이다. 이 이론은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케링이 1982년 3월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 (Fixing Broken Window: Restoring Order and Reducing Crime in Our Communities)이라는 글에서 처음 소개됐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이다.

뉴욕시, 현실에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접목해 성공

깨진 유리창 이론을 현실에 접목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뉴욕시의 경우다. 1980년대 뉴욕시는 중범죄 사건이 빈발하는 우범지대였다. 특히 뉴욕 지하철은 대표적인 범죄 공간이었다. 뉴욕시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지하철에 적용했다. 우선, 지하철 역사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던 낙서를 제거하기로 했다. 낙서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를 깨진 유리창과 똑같은 상태라고 본 것이다. 지하철 낙서 지우기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데는 5년이 걸렸다. 낙서가 제거된 후 놀라운 일이 생겼다. 지하철 범죄 발생률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에는 범죄 발생률이 절반으로 줄었다. 당시 줄리아니(Rudolph William Louis Giuliani) 뉴욕시장은 뉴욕경찰에도 깨진 유리창 법칙을 도입했다. 거리의 낙서를 지우고, 신호위반 등 경미한 범죄부터 철저히 단속했다. 그 후 뉴욕시의 범죄 발생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뉴욕은 범죄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어 하는 도시로 탈바꿈했다.

1:29:300의 법칙

우리 사회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 적용되어야 할 곳 중 하나가 산업현장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작고 사소한 것들이 방치되면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진다. 산업현장의 사고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경험했던 대형 안전사고는 사소한 위험의 징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에 따르면 한 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유사한 경미한 사고가 29번이 발생하고, 평균 300번 이상의 관련 징후가 존재한다고 한다. 그의 저서 『산업재해예방: 과학적 접근(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 Scientific Approach)』에서 소개한 1:29:300의 법칙이다. 다시 말하면, 대형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사소한 사고가 반복된 후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의 산업현장에서는 매년 9만여 명의 근로자가 부상하고, 2천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사망하고 있다. 하루 평균 250명이 다치고, 매일 5명이 목숨을 잃는 셈이다. 부상과 사망에 이르기까지 산업현장에는 무수한 사고의 징후가 존재했을 것이다. 많은 근로자, 사업주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또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안전을 소홀히 한 결과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64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재해자

수는 모두 430만명이 넘고, 사망자도 8만명에 이른다. 인천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인구를 합친 수의 사람들이 다치고, 경기도 과천시 전체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 적용되어야 할 산업현장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심각하다. 한해 사고로 인한 손실이 18조원이 넘는다. 연봉 2천만원 상당의 근로자 90만명을 1년간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이, 자동차 120만대를 수출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 산업재해로 사라지는 셈이다. 산업재해는 이렇게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 산업현장에 도입되어야 할 이유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위험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위험을 보고 그 상태를 제거하는 활동이 생활화되어야 한다. 여기엔 사업주와 근로자의 역할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안전은 특정 계층, 특정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이룰 수 있는 사회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사소한 위험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 현장 분위기, 300번의 징후와 29번의 경미한 사고 단계에서 주변의 위험요소를 꼼꼼히 살펴서 깨진 유리창을 갈아 끼움으로써 더 큰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습관과 문화가 확산될 때 우리 사회는 진정한 산재예방의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 산업교육의 산실, 중소기업연수원



이은성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장
(les@sbc.or.kr)

경기도 안산에 자리한 중소기업연수원은 중소기업 인력의 경쟁력(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1982년 10월에 설립된 공공연수기관이다. 경기도 안산(본원) 개원을 시작으로 광주, 대구, 진해 등 각 지방 거점 도시에 4개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 태백에 개원을 준비중이다. 2013년 9월 현재 약 120만명의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다녀갔으며, 2005년 이후로는 해마다 5만명 이상의 인원이 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중소기업 임직원 전용 연수원이다.

다양한 직무교육 제공, 중소기업의 사내 연수원 역할 수행

연수원은 개원 이래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교육훈련 프로그램 또한 지속적인 변화를 해왔다. 석·박사급 전문 인력이 연간 920여 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기숙사 시설의 제공과 함께하는 집합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1990년대 중반부터 IT,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원

격(인터넷, 우편)연수를 도입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중소기업의 상황과 특성, 그리고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연수방식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한발 더 나아가 기업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이론 강의와 함께 해결하는 문제해결식 ‘현장연수’를 도입했다.

2000년대 이후 많은 민간교육기관이 산업교육시장에 생겨나 경영자와 임직원을 위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에게는 비용문제, 참가기업 간의 격차, 시간적 제약이 상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현안사항에 대해 마음 놓고 토론하고 학습해서 해결방법을 얻는 데에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이에 우리 연수원은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직무 관련 공통 부분은 최대한 많은 과목을 개설하여 선택의 폭을 넓게 하고, 분야별 전문교육은 시대별 트렌드를 중심으로 특화하여 집중 교육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다양성과 전문성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연수원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에 제공하여 사내연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수익성이 없어 민간교육기관에서는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시책 중심의 양성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교육과정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는 점도 중소기업연수원만의 차별화된 특징이다.

지속적인 창조적 혁신을 위해 앞장서는 중소기업연수원

외부 환경의 불안정성이 오히려 정상적일 정도로, 지속적인 외부 환경의 급변은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1955년 한국 100대 기업에 선정된 기업 중 50여 년이 지난 2004년에 다시 100대 기업에 포함된 기업의 수는 7개에 불과하다.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몰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매우 짧아지고 있다. 기업은 자원을 투입하여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만이 아닌, 외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는 ‘유기체’이다.

지속적 생존의 비결은 외부 환경에 맞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창조적 혁신’이 필수로 기업 경쟁력뿐 아니라 생존 자체를 좌우한다. 그런데 기업이 ‘창조적 혁신’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학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학습은 끊임없는 변화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푸시(Push)방식을 넘어 풀(Pull)방식으로

지금까지 연수원은 중소기업 인재 양성과 함께 정부시책 중심의 양성교육을 중소기업 을 위해 제공해 왔다. 이제 중소기업연수원은 푸시(push)방식의 교육프로그램 수준을 풀(pull)방식으로 연수프로그램을 개별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기술발전이 빠른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이다. ‘학습을 통한 혁신’과 ‘개인역량 개발’을 위해 끊임없는 학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풀(pull)방식 개별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은 정책자금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후, 이를 기반으로 한 연수 연계로 실질적인 기업성과에까지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써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즉 중소기업들은 단편적인 내부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던 것을 자사의 전략방향, 내부역량을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에 있어, 학습은 미래의 자본이다. 여기에 중소기업연수원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공공기관 부채, 해결책은?



김영우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혁신본부장
(ywkim@kr.or.kr)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 재정건전성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언론 등을 통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들이 국회에 제출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2013년 말 520조원에서 2017년 말 573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정부부채까지 포함하면 1,000조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재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것만으로 공공기관 부채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또한 부채가 국가 사업을 대행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도 있고 방만 경영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하는 것도 부채 해소를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중요하다고 본다.

전국의 철도망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우리 공단도 소극적인 대책만으로는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먼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예산절감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고속철도 건설 부채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 부채해결을 위해서는 당해 기관뿐만 아니라 정부와 이해관계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고속철도 건설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선로 사용료

철도는 전국의 주요 거점 간을 신속하게 운행하는 고속철도, 중소규모 도시 운행 및 대량화물을 운송하는 일반철도, 수도권에서 대규모 승객을 운송하는 광역철도 등으로 구분되고, 건설재원 조달도 각기 다르다. 일반철도와 광역철도는 국가 또는 국가와 지자체가 소요재원을 분담하므로 공단 부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수익성이 있는 고속철도는 공단이 건설비의 50~60%를 자체조달

하여 국가에 이관하고 철도사업자의 선로사용료를 통해 부채를 상환하고 있다.

그동안 공단은 12조 5천억원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하여 경부고속철도를 개통하고 호남·수도권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있으나,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징수 부족으로 이자만 2조 5천억원이 증가하였다.

당초 고속철도 건설부채는 철도운영사업자로부터 선로사용료를 징수하여 30년 이내 상환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운영 사업자가 낸 선로사용료 중 유지보수비용을 제외한 부채상환 재원은 9년간 7천억원으로 그동안 발생한 이자의 22%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철도공사에 고속철도운영 독점권을 부여하면서 독점사업자에게 고속철도 유지보수업무까지 위탁하고 그 비용도 공단이 지급토록 하고 있어 급격히 늘어나는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고속철도건설 부채 감소를 위한 자구노력과 함께 선로사용료, 경쟁도입 필요

2011년 8월 현 CEO 취임 이후 공단은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급격한 부채증가를 공단의 주요 경영위기로 인식하고 건설과정에서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최소비용으로 최고품질의 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 과잉시설 없는 경제적 설계와 이용자 편의와 수요를 고려한 시설 최적화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지자체 등의 과도한 요구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설계 VE(Value Engineering)를



〈호남고속철 정지고가 건설현장〉


통하여 각 사업단계별로 시설규모를 재검토하고 비경제적 설계요인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2년간 공단은 사업비 1조 7,385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더 많은 철도를 건설하여 국민의 교통편의 제공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이외에도 공단은 종전의 6% 고금리 교특용자금을 3%대의 저금리 장기 채권으로 차환하고, 공단 신용도 최고등급 유지를 통한 저금리 채권발행, 채권발행 시기 이연 등 전략적 재무관리를 통하여 공단 설립 이후 최초로 2천억원의 순부채를 상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자구노력과 더불어 공단은 고속철도 부채감소를 위한 현재의 선로사용료 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와 철도공사를 설득하여 영업수입에 따른 비율이 아닌 고속철도 사용량에 따른 사용료인 단위선로사용료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고속철도 경쟁 도입을 위해 협의하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 결과가



〈대전역 주변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철도시설공단 사옥〉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고속철도는 30년, 경부·호남 고속철도는 40년 이내 전액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2016년부터 고속철도 건설부채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되고 우리 세대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후손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종사자는 증가하는 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에 정책지원 요구보다 기관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늘도 마른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부채를 줄이기 위한 공단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다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공급운영처장
(cmjang@lh.or.kr)



2009년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전세 값이 꺾이지 않고 있다. 전세 값 상승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가까운 과거를 거슬러 살펴보더라도 1987년부터 1990년까지 무려 80% 가까이 상승하였고,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90% 상승하였다. 과거의 전세난은 주택의 절대적 공급 부족 등 부동산시장 내적인 문제가 주된 원인이었으나, 최근의 전세난은 인구의 고령화, 주택 구매력의 감소에 따른 전·월세 수요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과거와 같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부가 전·월세 안정대책으로 다양한 방안을 내놓은 것을 보더라도 금번 전월세난의 원인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세를 공급하는 주체인 집을 가진 사람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이 감소하는 공급부족과 더 이상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주택을 구입하기보다는 전세로 임차하려는 수요 증가가 맞물려 전세값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

정부는 전월세난 대책으로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핵심 골자로 하는 8·28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경제력이 취약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핵심 정책이다. 민간임대사업자에게는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공임대사업에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임대사업자에는 정부의 지원과 함께 공공임대사업 확대를 적극 독려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중요성

주거복지정책의 핵심수단 중의 하나인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한번 건설되면 50년 이상 사용하는 사회적 인프라이고, 저소득층이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주거안정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으며, 건설경기 활성화 등 국가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재산 형성과 가치분소득 확대를 통한 소비 활성화로 국가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도 긍정적인 면이 많은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쉽지 않은 이유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초기재원은 많이 투입되지만 회수하는 데 장기간 소요되고 입주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여야 하므로 회수가 쉽지 않으며, 국가의 장기간 동안의 일관된 지원과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 사회적 참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간 임대사업자와 공공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게 택지개발 등을 통해 임대주택용 택지를 조성하여 원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 또는 임차하여 2013년 기준으로 76만호(우리나라 임대주택의 80% 차지)의 임대주택을 저소득층 가구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공급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다.

LH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들이 얻는 경제적인 혜택, 즉 주거편익 효과는 시중 전세가 대비 낮은 임대료로 인해 작년 말 기준으로 연간 1.3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그 효과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H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뿐만 아니라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부응하

〈표〉 LH 임대주택 운영현황

(단위: 호)

건설 임대	영구임대	140,370
	국민임대	383,934
	10년 임대 등	53,518
매입 임대	다가구	50,753
	공동주택	34,473
전세임대		95,276
계		758,324

기 위해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고령자와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등 각종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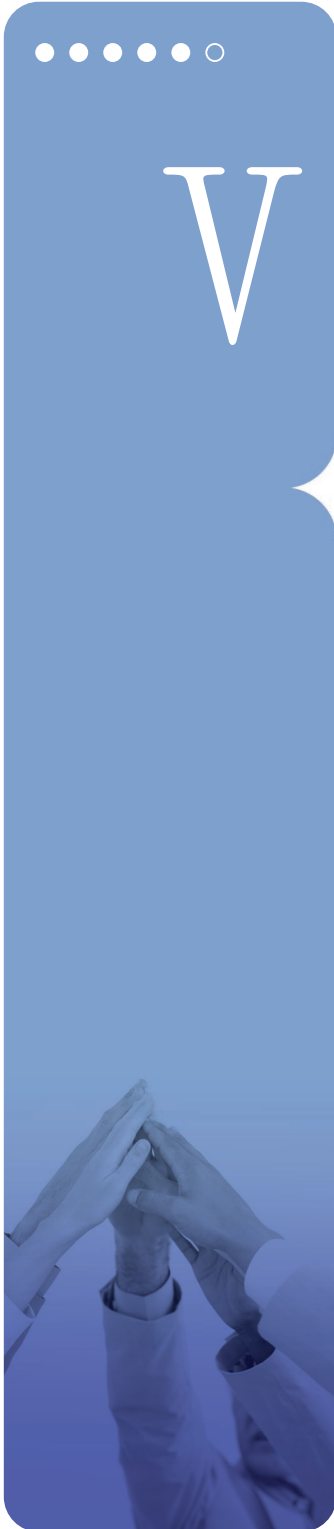
그렇다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첫째, 안정된 자원 확보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정책목표를 견지하여야 하고 정책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둘째,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공공의 재원부담 경감을 위해 민간의 자본과 협력하여 건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확대정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만으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 목표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택바우처와 같은 임대료 보조정책을 적극 도입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

주자의 특성, 임대료 수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DB(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지속 필요

주거복지란 ‘사회 구성원이 자신들의 기본적인 주거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때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화된 활동의 총체’로 정의될 수 있으며, 주생활은 인간의 삶에 가장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다.

최근의 전월세난의 근본적인 해소와 주거 욕구 지원이 필요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 최근 모 지상과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만족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수행의 큰 축을 담당하는 공기업 직원의 한사람으로서 뿌듯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좋은 사례 나누기

- 기관 특성에 맞는 출자 관리 모델 정립
한국동서발전
- 글로벌 파트너링을 통한 중소기업 협력사업 추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공항 지식기반 R&D경영을 통한 공항핵심장비 국산화개발
인천국제공항공사

* 좋은 사례 나누기에서는 공공기관이 각 부문별로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기관 특성에 맞는 출자 관리 모델 정립

■ 한국동서발전 소개

- 한국전력공사 발전 부문이 6개 발전 자회사로 분할되어, 한국동서발전(주) 설립 (2001. 4. 2)
- 목적 사업 : 전력 자원 개발, 발전, 연구·개발, 관련 해외사업·부대사업
- 조직 : 2본부, 4처·6실, 1센터, 5개 사업소, 1지사 (정원 2,201명)
- 재무 현황 : 자산 6.1조원, 매출액 6조원, 당기순이익 1,700억원
(2012년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

■ 도입배경

-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출자 관리 강화 정책(국정과제) 부응
- 신규 투자사업 전략 변화



■ 추진과정 및 내용

1. 목적 및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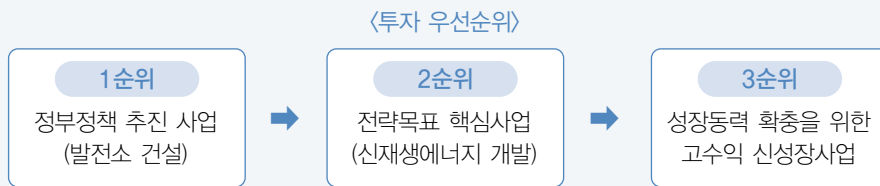
신규 투자사업 내실화를 통해 투자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 심의 프로세스부터 투자 사후관리·출구 전략에 이르기까지 투자사업 생애주기 전반에 관한 관리 체계 개선

2. 출자 관리 모델 정립 과정



3. 제도 개선 주요 내용

- 해외사업 리스크를 철저히 검토하고, 투자 의사결정의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심의 프로세스 개선
 - 투자 심의를 출자관리 전담부서(출자관리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개발부서와 함께 사업 타당성 및 리스크 크로스 체크
 - 리스크관리위원회 사외 전문가를 1명에서 2~3명(전체 심의위원의 1/3 이상)으로 확대
- 투자 우선순위 설정 및 투자 포트폴리오를 고려한 투자 의사결정



- 수익성 중심의 신성장사업(투자 3순위) 투자 시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당해 투자로 인한 기대수익 증가율이 리스크 증가율을 상회할 때에만 투자 결정
- 이를 통해 투자 자원 배분의 최적화 달성
- 투자 수익성 제고를 위한 투자 사후관리 강화
 - (필요성) 출자회사 자율경영·사후적 경영평가만으로는 수익성 확보에 불충분하며,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변화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 사업 운영 개시 후 3년까지는 투자시점의 재무 모델(수익성 예상자료)과 실제 운영 실적의 차이 분석을 통해 수익성을 관리하며, 3년 경과 이후부터는 사업을 운영하는 출자회사의 재무비율 분석을 통해 투자사업의 수익성·안정성·성장성 관리
 - 사업부서와 출자관리부서의 협업을 통한 Global Risk Reporting체계 구축
- 성과가 저조한 사업 및 투자계획상의 목적을 달성한 사업에 대한 출구 전략 실행 기준·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투자결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Exit Plan이 사전에 마련된 사업에 대해서만 투자 허용


〈출자 관리 모델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2013. 9월)〉



■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투자 심의 강화를 통한 투자사업 경제성 확보
 - 충분한 사업 리스크 분석 및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통해 사업개발부서로 하여금 투자 대상 사업을 신중하게 선정하도록 유도

- 투자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투자 수익성 제고
 - 운영 단계 사업에 대한 수익성·리스크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사업 환경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투자사업의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확보

- 필요시 출구 전략 실행을 통해, 경영 전략을 반영하여 투자 포트폴리오 최적화 

〈신사업 투자 관련 문제점 진단·해소〉

문제점 진단	문제점 해소 ('출자관리 모델 3.0')
외부 전문가 위촉을 통한 사업성 평가 객관성 확보 필요	리스크관리위원회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1인 → 2~3인)
투자심의 과정에서 사업개발 부서를 견제하는 부서 필요	투자심의 담당(회의 소집·운영)하는 출자관리팀 신설(기획처 소속)
투자심의 과정에서 투자 우선순위, 포트폴리오, 출구전략 검토 필요	투자 우선순위 및 포트폴리오 원칙 설정, 출구전략 포함하는 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사업 · 성과관리



글로벌 파트너링을 통한 중소기업 협력사업 추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소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창립 (1962. 6)
- 설립목적 :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 조직 : 5본부 23실 7단(본사), 82개국 9지역본부 120개 무역관(해외지사), 임직원 총 690명

■ 도입배경

-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의 열쇠는 시장이 아닌 ‘글로벌기업’
 - 중소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는 글로벌 시장을 독자적으로 뚫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GE Healthcare의 연간 부품조달 금액(약 80억달러)은 미얀마의 연간 총수입액(약 40억달러)보다 큰 것처럼, 글로벌기업의 소싱 수요야말로 새로운 시장이자 기회가 아닐 수 없다. 그러한 글로벌기업의 가치사슬에 우리 부품소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관건이었다.
- 글로벌기업이 우리 중소기업을 끌어주는 ‘동반성장’ 도 가능하다
 - 글로벌기업은 그간 신흥국 시장에 많이 진출해 왔다. 하지만 중국 등 신흥국 현지

서 소싱하기 어려운 핵심 품목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일본의 부품소재에 의지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컸다. 따라서 글로벌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이제 부품, 모듈, 솔루션 등 중간재를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의 공장에 공급하는 기지로서의 역할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온 셈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의 기업들이 하던 역할이었다.

당장 기술이 부족하더라도 정부와 KOTRA의 지원하에 글로벌기업과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길을 글로벌파트너링사업이 열어준 것이다. 즉 글로벌기업의 수요가 우리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고, 여기에 촉매제를 가미한다면 글로벌기업과 우리 중소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동반성장이 가능한 것이다.

■ 사업소개



글로벌파트너링사업(GP사업)이란?

글로벌기업의 구체적 수요 발굴·연계를 통해 한국 중소기업과 제품 개발단계부터 공동 R&D를 추진하여 개발된 기술이나 부품을 글로벌기업에 납품 또는 글로벌기업과의 공동마케팅 등 다양한 유형의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

- ‘先마케팅-後기술개발’ 로 R&D의 글로벌 사업화 성과 제고
 - 글로벌파트너링사업은 글로벌기업이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첩경이라는 시각에서 시작되었다. 기존의 정부의 R&D 정책이 ‘先기술개발-後마케팅’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KOTRA가 R&D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서 ‘先마케팅-後기술개발’이라는 글로벌기술사업화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것이다. 적어도 그간 업체에게 모든 것을 맡겨왔던 분야를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수요기반의 R&D 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이다. 물론 KOTRA가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R&D 관련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서 가능했고, KOTRA가 발굴하는 글로벌기업의 수요는 신규 R&D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 GP사업 연계 정부 R&D 프로그램 : 지경부 글로벌동반성장 R&BD 프로그램 (2012년 35억원), 중기청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글로벌협력과제(2012년 30억원)

- 무역투자진흥기관의 새로운 역할 제시 ⇒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 기관으로!
 - KOTRA가 변화된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기업의 포지셔닝 변화에 맞추어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 마케팅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를 고민해서 나온 사업 모델인 것이다. 이제는 수출마케팅도 R&D와 기술개발 등이 연계되지 않으면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한 것이다. 아직 진행형이긴 하지만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야말로 무역진흥기관의 새로운 역할과 방향을 제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추진과정

-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위한 융복합 지원이 가능한 One-roof 서비스 체계 구축
 - GP사업은 무역 2조달러 달성을 위한 KOTRA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정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사 내 전담부서(글로벌파트너링사업팀) 신설(‘10.8월부)을 통해 글로벌기업(수요자) 관점에서 아웃소싱, 기술거래, 투자 등 다양한 수요를 융·복합적으로 지원하는 One-roof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해외마케팅 지원과 외국인투자 유치로 이원화된 공사 사업구조의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다.

- 글로벌기업과의 MOU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 Hot-line 구축
 - 글로벌기업의 수요와 R&D를 연결하는 것만이 모두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부품소재 기술이 글로벌기업에게 통하기 위해서는 인력, 물류, 금융 등 다양한 비즈니스 지원이 필요하다. 기술개발만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의 마음을 사로잡기는 어렵다. 이에 2012년에 들어서 글로벌파트너링사업은 기술개발 지원에서 나아가 복합 비즈니스 개발(Business Development)을 위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Applied Materials(세계 최대의 반도체 장비제조사), Caterpillar(세계 최대의 중장비 제조사), Suzuki(일본 5대 자동차 메이커), 히타치 조센(일본 대표 기계플랜트 제조기업) 등과 글로벌파트너십 MOU를 체결하고 적격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히타치 조센에는 공대생 출신 인력을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인턴으로 보내 한국 중소

기업 전담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 공대생 인력의 해외진출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 높은 수출성과는 기본, KOTRA의 수출 성과기여도에 대한 고객의 체감 확대
 - 글로벌파트너링사업을 추진한 지는 3년 정도가 되었으나, 그간 성과는 그야말로 막대하다. 세계 최대의 건설중장비 기업인 C사는 GP사업 참여를 통해 2010년까지 불과 3개사에 불과했던 국내 벤더 수를 2011년 11개사까지 늘렸고, 2012년까지 20여개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으로부터의 부품소싱 규모는 2010년 3천만달러 수준에서 2015년까지 5억달러까지 증가할 예정이다. 우리 중장비 부품기업이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글로벌기업의 중장기 파트너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통신장비 제조기업인 A사는 국내기업 O사에 고성능 트랜시버 개발을 의뢰하였고, KOTRA는 이러한 R&D 수요를 지경부 부품소재기술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2012년에 약 2~3천만달러 규모의 납품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 국내기업의 기술력을 인정하여 글로벌기업이 더욱 협력에 열성적인 상황이다. 또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장비기업인 A사도 국내 대기업인 삼성과의 거래 확대를 위해 미국산 부품의 상당부분을 한국산으로 대체하는 국산화(localization) 프로젝트를 KOTRA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창출될 수출성과는 수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 글로벌기업의 기업의 가치사슬에 편입을 통한 중소기업 ‘업그레이드’
 - 결과적으로 KOTRA가 수요를 발굴하고 그 수요를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와 연결시키기 위해 R&D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연계하여 단기간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KOTRA가 글로벌기업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지원하지 않고서는 달성하기 어려웠으며, 이를 통해 KOTRA의 수출 성과 기여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의 가치사슬에 직접 편입되면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현실에서 시현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 성공요인

- 글로벌기업의 수요 확보라는 KOTRA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글로벌기업의 가치사슬에 편입되고 정식 벤더로 등록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주된 성공 요인이다. 이제는 단순히 준비된 부품을 들고 세일즈를 하는 시대는 지났고, 제품 개발 단계부터 글로벌 수요기업의 수준 높은 요구사항을 맞출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했기에 가능했다.

■ 향후 계획

- 이제는 신흥국이다. 지금까지의 글로벌파트너링사업은 선진국에 소재한 글로벌기업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신흥국 시장도 글로벌기업에는 새로운 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중국시장이 수출기로서 의미 컸지만, 이제는 중국 내수시장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략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현지의 신투본이 글로벌기업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제 서구의 선진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해외의 우수한 기술 파트너들과 협력을 갈망하고 있다. 이러한 신흥국 시장에서 글로벌파트너링사업의 확대는 우리 부품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기술력은 있으나 신흥국 시장에서의 마케팅 네트워크나 영향력이 부족해서 진출이 어려웠던 부품기업을 위해 새로운 협력 모델 발굴을 준비하고 있다. KOTRA의 글로벌파트너링사업의 영역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고, 이를 통해 끊임없이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사업 · 성과관리



공항 지식기반 R&D경영을 통한 공항핵심장비 국산화개발

■ 인천국제공항공사 소개

- 인천국제공항공사 설립 (1992. 2)
- 설립목적 : 인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 운영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운송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 조직 : 4본부 2실 25처 95팀 1해외지사, 임직원 총 984명

■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항공운송량 규모 면에서 세계 6위의 위상을 갖고 있고,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7연패를 달성하고 있지만, 국내의 협소한 항공산업 시장규모로 인해 인천공항에서 운영되는 최신의 핵심장비 대부분은 외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조달이 어려우며, 시설 확장에 따른 운영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은 이들 외산시설의 국산화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지만, 공동 개발할 수 있는 국내 전문 파트너 기업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며, 그렇다고 자체 연구개발 조직을 제대로 갖추고 개발하기에는 공기업 특성상 어려운 일이다.

국내 산업계 측면에서는 개발 잠재능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시장이 작고 설령 개발을 한다 해도 판로가 보장되지 못하여 검증된 납품실적이 없기 때문에, 외산과의 경쟁에서도 뒤지므로 선뜻 개발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었다.

반면에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해외 선진 공항기업은 자회사 등을 통해 해외 공항건설, 운영, 컨설팅 등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데 이는 자국 내 발달된 항공산업과 관련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계속적 혁신을 이루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추진과정

- 인천공항은 공항 핵심시설 국산화 개발을 위해 2010년 8월 연구개발단을 신설하고 공항 운영노하우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R&D경영을 추진하면서, 2010년 6월부터 공항 핵심장비의 국산화 개발 과제 발굴과 사양 개발을 추진하였다. 대표적인 국산화개발 과제로는 항공기 지상전원공급장치(AC-GPS : Air Craft-Ground Power Supply), 항공기 운항정보 표출시스템(FIDS), 항공기 지상 냉난방공급장치, 항공기 시각주기유도시스템(A-VDGS), 비행장 관제시물레이터 등을 들 수 있는데 대부분 인천공항 운영효율화 증진 및 3단계건설에 활용될 예정이다. 2011년 1월에는 중소기업청에서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공항 외산장비의 국산화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본 사업은 중기청과 公社가 공동으로 각 25억원씩 3년간 50억원의 기술개발기금을 조성하고 과제당 10억원 미만의 발굴된 과제별로 전문 중소기업을 선정 후 공동으로 기술개발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公社가 해당 제품을 자발적으로 구매해 주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 산학연 기술협력을 통한 과제발굴과 공동연구를 위해 항공대 등 6개 기관과의 MOU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연구개발 수행방식과 과제별 성격에 따라 자체수행 및 정부과제화 등으로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선행 기획연구 및 산학연 협력 자문을 통해 실효성을 증진하게 되었다.

■ 성과 및 효과

- 이와 같은 노력으로 전사적 기업문화 측면에서 지식공유문화 활성화와 창의 혁신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도전의식을 제고시켜 BSC(Balanced Scorecard)적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경제적 측면에서는 공항시설 국산화개발로 인해 公社가 향후 3년간 약 42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하여 약 400억원의 외화절감과 약 100억원의 원가절감이 기대되며, 이와 별도로 유지보수 비용절감과 기술료 수입이 예상된다. 또한 국내 참여 중소기업은 공항산업분야 신제품 개발과 판로를 개척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금년도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항공기 지상전원공급장치 국산화개발 사례

항공기 지상전원공급장치(AC-GPS : Air Craft-Ground Power Supply)는 항공기가

엔진정지 상태에서 지상에 계류할 경우 항공기에 외부 전원을 60Hz에서 400Hz로 변화하여 공급하는 장치로서 개발된 90KVA 용량 1대는 일반가정용 전력의 120배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본 장비는 2000년부터 인천공항에 약 100여 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량 외산으로 현재 노후화로 인한 교체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17년까지 인천공항 3단계 건설 수요와 4단계 건설 수요 등을 감안하면 향후 200여대에 대한 신규수요가 예상되며 외산을 도입할 경우 외화소진과 유지 보수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기청 민·관 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을 통한 국산화개발에 착수하여 2011년 6월 AC-GPS개발을 위한 전문 중소기업체를 선정한 후 1차년도는 개발자료 수집과 시제품 설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차년도는 시제품 제작에 들어가 2012년 10월 개발에 성공하였다. 본 장비는 옥외 이동식 탑승교 하부에 부착되므로 경량화를 위한 콤팩트한 디자인과 옥외설치에 따른 내구성이 개발의 중요한 관건이었는데 이를 위해 자재 경량화와 내후성 설계에 주력하였다. 또한 외산대비 기능을 개선하고자 월 1회 이상의 진도 점검회의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국내 발달된 IT기술을 활용하여 터치식 감시 제어장치 기능과 접속케이블 운영방식 등도 국산화하여 개선하였다.


본 장비의 개발비는 총 약 6.8억원으로 公社가 2.6억원, 중기청 2.6억원, 중소기업이 1.7억원을 각각 부담하며, 기대효과로는 향후 2025년까지 외산대비 약 24억원 이상의 구매원가절감과 약 167억원의 외화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유지관리측면에서도 연간 약 5천만원 이상의 원가절감과 국내외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기술료 수입도 추가로 기대된다. 또한 항공사 측면에서는 AC-GPS를 적기에 사용 가능함으로써 항공유 절감에 따른 연료비절감이 가능하고 탄소배출을 저감(항공기 엔진가동대비 약 90%)으로써 친환경적인 항공기지상조업이 가능하다.

■ 성공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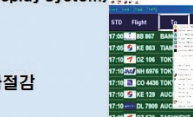
- 인천공항은 2001년 성공적인 개항 이후 그 동안 체계적으로 축적된 건설 및 운영 자료와 직원들의 노하우를 지식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2009년부터는 CEO의 의지에 따라 구축된 지식을 직원들에게 내재화하여 새로운 지식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지식자산화관련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고 창의·혁신적 지식창조문화 조성에 힘써 왔다. 2010년에는 구축된 지식을 보다 실용화하기 위해 연구전담조직을 본격 구성하면서 지

식사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기반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과정에 현업부서의 운영노하우를 자연스럽게 접목할 수 있었으며, 연구동아리 활동 등을 통한 매트릭스 조직운영 방식도 실무와 R&D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에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공항R&D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과 무엇보다 중기청 등 정부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술개발지원 프로그램이 큰 보탬이 되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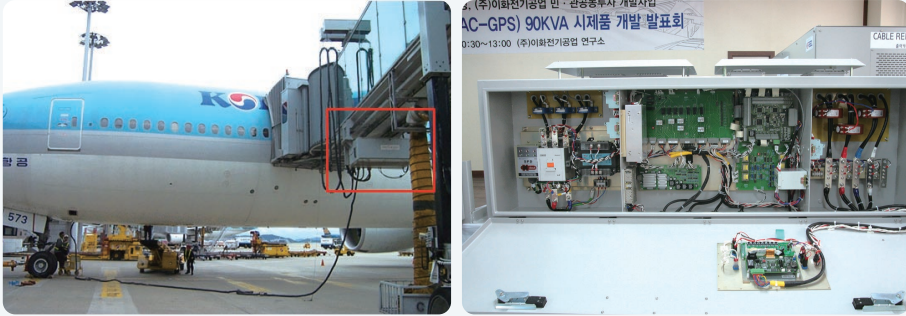
■ 향후 계획

- 인천공항은 그동안 외산에 의존해 오던 시설들을 점차 국산화하면서 외산 제품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국내 자체기술을 융복합하여 접목하고 2017년 완공예정인 공항 3단계 건설 등에 적기에 적용함으로써 공항 운영 효율화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산업분야 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국내 기업과의 동반성장을 꾀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컨설팅 위주의 해외 공항사업에서 벗어나 짧게는 내년부터 개발된 장비의 해외시장 마케팅과 함께 우리 공항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공항을 수출하는 세계선도 공항기업으로써 발돋움할 계획이다. 

〈그림 1〉 인천공항 국산화 개발과제 사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지상전원 공급장치(AC-GPS) 국산화 / AC-GPS : Aircraft-Ground Power Supply ● 연구기간 : '11. 08 ~'14. 07 (36개월) ● 연구예산 : 680백만원(공항공사 부담금 : 250백만원) ● 기대효과 : 3단계 적용 및 노후시설 교체, 해외사업 활용 약 24억원이상 원가절감 및 167억원 외화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냉난방장치 장치(PC-AIR) 국산화 / PC-AIR : Pre-conditioned Air-conditioning ● 연구기간 : '11. 10 ~'14. 09 (36개월) ● 연구예산 : 630백만원(공항공사 부담금 : 230백만원) ● 기대효과 : 3단계 적용 및 노후시설 교체, 해외사업 활용 약 19억원이상 원가절감 및 128억원 외화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시각주기유도(A-VDGS) 국산화 / A-VDGS : Advanced Visual Guidance Display System ● 연구기간 : '12. 10 ~'15. 03(30개월) ● 연구예산 : 910백만원(공항공사 부담금 : 340백만원) ● 기대효과 : 노후시설 교체 및 해외사업 활용 약 16억원이상 원가절감 및 108억원 외화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항정보표출시스템(FIDS) 국산화 / FIDS : Flight Information Display System ● 연구기간 : '10. 11 ~'14. 10(48개월) ● 연구예산 : 3,400백만원(자체 과제) ● 기대효과 : 3단계이후 국산화 적용에 따른 약 40억원이상 원가절감 및 30억원 외화절감 	

〈그림 2〉 항공기 지상전원공급장치 국산화개발 시제품





VI

특 집

- International SOE Policy Conference 개최

* 이 원고는 KIPF공공기관연구센터가 기획재정부, 미주개발은행(DB)과 공동으로 2013년 11월 6일부터 이틀간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지배구조, 성과 그리고 우수 혁신사례>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International SOE Policy Conference 개최



“
Governance,
Performance, and
the Best Reform Practices ”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공공기관연구센터는 기획재정부,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지난 11월 6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공공기관 정책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지배구조, 성과 그리고 우수 혁신사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Ana Maria Rodriguez IDB 국장 외 IDB 관계자 2명, 중남미 13개국의 국·과장급 대표단 15명,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관계자 및 공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본 회의는 공공기관 정책 분야에서 다수의 중남미 고위 관료들이 참석한 첫 컨퍼런스로서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양측 공공기관 분야 협력관계가 정례화되고 실질적인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추진 배경

2012년 12월 6일(목) ~ 11일(화) 개최된 「IDB 인터내셔널 포럼」, 「중남미 경제기획부 장관회의」, 「한-페루 공공기관 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하였던 당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김철주 국장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박 진 소장은 중남미 국가들에게 한국의 공공기관 정책 경험을 소개하고 한국의 경제개발과 위기극복 경험을 전파했으며 페루 전략기획원과 재정 및 공공기관 정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정책협업네트워크 필요성에 공감

■ 논의 주제

국가발전과 공기업의 역할, 공기업 지배구조, 공기업 성과관리, 공기업 부채관리, 민영화와 시장경쟁

International SOE Policy Conference 세션 1

Session I 은 국가별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기업의 역할(SOE IN THE NATIONAL DEVELOPMENT : CONTRIBUTION AND DILEMMA)을 주제로 하여 한국, 파라과이, 에콰도르의 발표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기업의 역할,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파라과이는 공기업 분류 및 역할, 위험요소, 에콰도르는 공기업 지배구조 및 법안, 혁신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국가별 발표에 대한 Q&A 세션에서는 공공요금, 예산, 부채, 투자재원 조달방식, CEO의 역할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 및 토론이 있었다.

- 일 시 : 2013년 11월 6일(수) ~ 7일(목) 9:00 ~ 18:00
- 주 제 : SOE IN THE NATIONAL DEVELOPMENT : CONTRIBUTION AND DILEMMA
- 발제자 : 조봉환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 파라과이 Elvio Brizuela, 에콰도르 Carla Baez

발제 1

[한국] 조봉환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

■ 한국의 경제개발과 공기업의 역할(Development of Korea and Role of SOEs)

- (한국경제의 성장과정) 1962년부터 정부 주도하에 5년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 특정 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고 수출진흥 정책을 실행
- (공기업의 역할) 사회간접자본 확충,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
 -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전후 경제복구를 위해 주택, 도로, 항만 등을 건설하고, 제조업의 성장을 도모하며, 국책은행 설립 및 민간은행의 국유화 등의 노력
 - EX) 산업은행의 금융자금 제공, 석탄/ 비료/전력 및 제조업 분야 공기업 설립
 - 재정수입 확보 : 전매사업 등 독점사업을 통해 재정적 수요(needs) 충족
 - 전략산업 육성 : POSCO 설립(1968), 국책은행을 통해 정부의 전략산업에 장기 저리자금 대출
- 전환기 : 정부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로 전환함으로써 시장경제 원리를 확대
 - 가격규제 완화, 금리 자유화, 수출지원 감소, 중화학공업 투자규모 조정
 - 공기업에 대한 자기책임 구조 강화 : 사전관리에서 사후평가로 전환
 - 민영화를 통한 민간부문 확대 : 「공기업 민영화법」 제정(1997)
- 외환위기 : 1997년 외환위기 이후(1998~2002) 구조조정 시기로 POSCO의 66개 자회사 등을 포함하여 공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민영화가 활발히 이루어짐

■ **공기업의 모순과 향후 과제(Dilemma of SOEs & Future Tasks)**

- (공공성과 수익성의 상충)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 공급, 민간부문과의 경쟁 제한 등 공익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재무건전성 관리를 통한 수익성도 추구해야 함
- (공기업 역할 강화를 위한 3원칙) 효율성, 자율성과 책임성, 투명성
 - 효율성 : 공기업 간 중복기능 해소 및 부채관리 강화, 기관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 창출
 - 자율성 및 책임성 : 중장기 계획을 통한 운영, 채용시스템 개선
 - 투명성 : 통합감시시스템 강화(ALIO), 연차 보고서 발간을 통해 정보 접근성 강화

■ **Q&A 세션**

- **페루 :** 저렴한 공공요금으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낮은 공공요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며, 한국의 물가상승 추세 속에서 공공요금의 원가보상률이 85%로 낮은 수준이므로 장기적인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전기요금은 금년 초 4% 인상하였으며, 추가로 요금을 인상하되, 취약계층에 보조금 지원도 병행할 계획
- **페루 :**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이자 기본원칙이므로 민간과의 경합 또는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민영화를 추진하게 됨을 강조하였으며, 신규 설립기관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가운데 어느 주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힘
- **파라과이 :** 한국의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과 부채의 성격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이에 대해 공기업 부채가 국가부채보다 많은 상황이며 공공기관에서 자구책을 강구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부채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부채의 성격에 대해서는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므로 대내 부채에 해당한다는 답변이 있었음
- **도미니카 :**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존재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공공기관 가운데 폴리텍 대학 등 소수의 교육기관이 있으며,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입시과정을 평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공기관에 해당함을 설명

발제 2 | [파라과이] Elvio Brizuela

■ **파라과이 공공기관의 분류 및 역할, 정부와의 관계 등에 대해 설명하고, 공기업 민영화 및 재조직화 법률에 관하여 사례와 함께 설명**

- (공기업의 분류) 1991년 민영화법 제정 이후 재화, 서비스 분야의 공기업이 민영화되어 대

부분 S.A(Société Anonyme, 주식회사)형태로 이루어졌으나, 2008년 공기업 재조직화 법률 제정을 통해 다시 국유화된 기업이 있으며 사례로 PETROPAR, ACEPAR 등이 있음

- 2002년 공기업 재정비에 관한 법률 1615호를 제정하고, 공공기관 감독기관이 설립되었으며, 2013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법이 제도화되었음
- 파라과이 5대 공기업의 총수입이 GDP의 8.3%, 납부하는 세금규모가 재정수입의 9%, 공공부문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가운데 7%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
- (공기업 등급 구분) :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목표달성률 65% 이하 : 불량 / 65~80% 달성 : 양호 / 85% 이상 : 만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NCSOE(공기업 국가위원회) 설립

- National Council(NC)가 출범하기 이전,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부실기업, 낮은 노동생산성, 방만경영, 기업전략 부재, 낮은 투자실적 등의 문제점이 포착됨
- 관리 및 위탁 계약을 통해 감독체계 도입, 정보수집 및 방향설정이 가능해졌으며 정성적, 정량적 지표로 평가를 시행하였음

● (공공기관 관리 및 감독) NC은 재무부, 공공통신부, 상공부, 검찰청 등이 참여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며, 투명성 제고 및 경제원칙에 입각하여 행정부의 정책수립 자문, 기관장 임명 및 해임 건의, 연간 사업/ 예산계획 분석, 공기업간 협업증진, 대통령 건의 등의 역할을 담당

● (정부와 공기업의 관계)

- 공기업 : 100% 정부지분이며 자체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기관장 체제하에서 국가일반 예산의 지정에 따라 예산이 결정됨(해당분야 : 전력, 시멘트, 항만과 공항 서비스 등)
- 공공유한회사 : 국가가 대주주로서 사회적 법령에 의해 운영되며 기관장 및 이사회에 의해 예산을 자율적으로 결정(해당분야 : 통신, 수도, 철도 서비스 등)

● (재정위험과 공기업 부채) 2012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공기업의 총 부채 추정치는 733만달러 수준이며, 향후 3년간 177만 5천달러의 투자가 요구됨. 이를 위해 투자기금(Investment Fund)의 조성이 필요함

■ Q&A 세션

- 페루 : 파라과이의 투자기금 조성계획과 투자방식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2018년부터 재정기금을 통한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투자방식은 에너지의 경우 공공기관인 전력공사가 관리하되 민간과 협력하는 시스템이며, 시멘트의 경우 민간기업에 운영권을 위탁하고 있음을 설명
- 브라질 : 브라질은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PPP모듈 및 Concession방식 중 100% Concession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어 정부가 참여하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됨. 이에 대해 파라과이의 경우, 전력을 예로 들면, 배전/송전/판매 등에 Concession 조달방식이 채택되어 단가 설정에 효율적임. 발전부문에서는 현재 민간과 발전사가 협의하여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며, 민간이 100% 결정하는 방식은 아님

- **한국** : 파라과이의 경우, 전력은 100% 국가가 지분을 갖고 있고, 예산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발전소 건설 시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이러한 의견에 대해 발전부문은 수출이 목표이므로 민간 참여가 100%이고, 발전부문의 내수시장은 없다고 밝힘. 수익성 보장을 위해서는 발전단가의 40% 이상 예산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발제 3


[에쿠아도르] Carla Baez

■ 지배구조 혁신 및 실천 우수사례

- (공기업의 기원) 1970년대말 철도청 설립, 1972년 이후 석유, 전력망 구축, 전기통신 공기업 설립
 - 석유탐사 개발권을 민간에 이양하고, 전력은 발전사들 간 상호 경쟁하며, 전기통신은 기업 자체 수익금을 사회개발을 위해 투자하도록 하되 기업 수익을 위해 재투자는 금지
- (공기업의 현 상황) 2007년 이전까지 공기업에 적용 가능한 일반 규정이 없었고, 규모의 경제에 대한 제한이 있었으며, 제도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음. 그러나, 2007년 이후 공기업 조직법을 제정하면서 비용을 최적화하고 공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회복
- **잘살기 위한 국가계획(2013-2017)** : 공공기관의 운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서 모든 공공기관의 자본조달, 투자의 기본 골격이 됨
- **공기업기본법(LOEP) 제정(2009)** : 공기업 설립권한 명시, CEO 및 이사회 권한과 책임 명시, 인력관리 제한, 파트너십 확장, 사회적 수입 및 보조금, 세금체계 등을 규정
- (공기업의 역할 및 향후 과제)
 - National Level(국가 차원) : 헌법, 공공기업법, 잘살기 위한 국가계획의 영향하에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 투자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함. 내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주도하며 이를 통해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 Regional Level(지역 차원) : 기술이전, 부가가치 접목, 중간재 생산프로세스의 통합, 경쟁보다는 협력을 촉진
 - 향후 과제로는 생산기반을 변화시키고, 지역 내 공기업들 간의 R&D 촉진, 지역의 이익

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전략산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

■ Q&A 세션

- 페루/온두라스 : 각 부처 장관 및 공기업 CEO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2009년 공기업 기본법 제정 후 이사회가 구성되었으며, 공기업 CEO는 경영에 집중하되 이사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힘. 공기업 이사회는 주무부처 장관이 참가하며, 의장 역할을 맡고, 각 기관별로 이사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음
- 자메이카 : 관계부처 장관이 이사회 의장이기 때문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고 양 주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해상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또한 이사회 활동 및 역할에 대한 평가가 필요
- 브라질 추가발언 : 공기업의 설립목적 및 사업보다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오르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사회와 정부 정책이 분리될 필요가 있음
- Session I 의 결론 : 국가간 협정을 체결시, 해당 국가간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국의 경험을 통해 중남미 국가의 경제성장 및 발전에 큰 의미가 될 것으로 생각함. 조직, 경쟁력, 전문성, 규정의 법제화 등이 공통적으로 논의되었음
- 민간부문에 이양할 필요가 있는 기관이나 사업, 기능에 대해서는 중남미 국가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며, 이사회 구성도 함께 생각해보아야 함 

International SOE Policy Conference 2세션 part 1

Session II에서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 조직과 감독」이라는 주제로 part 1과 part 2로 나누어 코스타리카, 페루, 한국, IDB, 칠레, 브라질 대표의 발제가 있었으며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part 1에서는 멕시코, 페루, 한국 대표의 발제가 있었다. 멕시코는 자국의 4대 주요 공기업을 소개하였고, 페루는 공공기관들을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하는 FONAFE란 기관을 소개하였으며, 한국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의 배경과 결과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일 시 : 2013년 11월 6일(수) 14:00 ~ 15:40
- 주 제 : SOE GOVERNANCE : STRUCTURE & OVERSIGHT (part 1)
- 발제자 : Mayra Calvo (Costa Rica), Titto Almora (Peru), 이호동(기획재정부), 위성백(사회자, 기획재정부)

발제 1

[코스타리카] Mayra Calvo 경제재무부 예산국

- 현재 코스타리카에는 전력, 국민보험, 석유정제, 상하수도 관련 4개의 주요 공기업이 존재하며 각 기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코스타리카 전력공사; ICE) 코스타리카 전력은 1949년 법령 제449호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행정, 재무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2개의 자회사가 있음
 - 미국과의 FTA를 계기로 2008년 기점으로 지배구조가 변경되었으며 매년 예산, 재무, 고용, 임금 체계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재무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채무는 총자산의 45% 한도내에서 자체적으로 질 수 있으며 초과시 정부의 승인이 필요
- (국민보험공사; INS) 국민보험공사는 독점하고 있던 보험·재보험 등의 사업을 2008년 이후 경쟁체제로 전환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공기업 중 유일하게 수익의 25%를 국고에 귀속하게 됨
- (코스타리카 정유공사; RECOPE) 코스타리카 정유공사는 정유·아스팔트 관련 사업의 독점권을 가지고 1961년에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예산, 투자, 임금, 채무 등은 행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연료 가격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감독국의 감독을 받음

- (코스타리카 상하수도공사; ICAA) 코스타리카 상하수도공사는 상수도 공급 및 정수 사업과 관련한 독립적인 기관이며 정부 위원회가 임명한 7인의 이사회가 기관경영에 대해 감독하며 감사원은 상하수도 요금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감독하고 있음
 - 국회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주정부는 채무 보증을 서며, ICAA의 이익을 국고로 귀속하지 않음

발제 2

[페루] Titto Almora 공기업금융기금

- 1970년대~1980년대 페루에는 200개 이상의 공기업이 존재하였으며 이들 기관은 GDP의 약 20%를 담당, 국가재정참여율이 60%에 달했으나, 현재는 35개의 공기업만이 존재하며 GDP의 5%를 담당, 주로 상하수도·전기와 같은 사회 인프라 관련 기업임
- 특히, 페루에는 5개 중앙부처의 장관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FONAFE라는 공공기관 관리기관이 존재하는데, 공공기관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관련 업무를 중앙집권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 공공부문의 예산은 국회의 심의를 받는 게 아니라 FONAFE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함
 - 기관 관리에 있어서 ITC 부문 등을 표준화하려는 노력(정보통신서비스, 호스팅 서비스)을 기울이고 있으며 감사회계보고서 요구 및 분기별 감사 등을 통해 투명성·국제공인성 제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음
 - FONAFE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의 투명성 등급을 매기고 있으며, 2013년부터 BGC CODE라는 윤리강령을 모든 기관에게 적용하고 있음
- FONAFE를 통한 공공기관 관리는 중앙집권적이라는 점에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할 수 있음
 - (장점) 각 기관의 경험과 운영전략을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정부와 기관 간 협력이 용이하고, 기관 간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며, 공공기관 조달과 관련하여 공동구매가 가능하여 원가 절감의 효과가 존재함
 - (단점) 반면, 이사회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공공기관 관리의 표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표준화가 어려운 부분에 FONAFE의 권력이 남용될 소지가 있으며, 35개 기관 2,400여명에 이르는 인력의 체계적 관리가 어려움

발제 3

[한국] 이호동 기획재정부

- 한국은 1983년 이전에는 주무부처의 사전적인 규제가 심하였으나 1984년 이후 경영평가제도를 도입, 2004년 공공기관 범위 확대, 2007년 공운법 제정이라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사후적이고 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공공기관 범위 관련)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준의 중복적용을 제거하려는 노력에 의해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탁 집행형), 기타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을 분류하게 됨
 - (지배구조 관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경영활동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핵심사업은 주무부처 소관으로 진행하는 구조이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면서 사외이사의 비중을 늘리고 감사의 역할을 강화하였음
 - (인사체계 관련)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1년씩 연임 가능

-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총량적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공공부문의 과도한 팽창을 견제할 수 있게 됨
 - 다만 모든 기관의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며 경영평가에 의한 성과관리 체계, 임원 선임 기준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Q&A 세션

- (Regoberto Romero, Honduras) FONAFE가 제시한 전략계획 가이드라인을 기관의 전략 기획에 반영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 (Titto Almora, Peru) 민영화에 대한 여론이 나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페루는 법으로 공공기관과의 경쟁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부문에 피해가 가는 사업에 대해서 경쟁을 금지. 가이드라인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전략을 제시하면 FONAFE가 심사하여 승인하고 있음

- (Roberto Garcia Lopez, IDB) FONAFE 이외의 통제기관이 존재하는가?
 - (Titto Almora, Peru) 페루 공기업은 지역 공기업과 중앙 공기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역 공기업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가 지분을 소유하며,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받으며 일부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

- (Elvio Brizuela, Paraguay) 공공기관들 사이에 동일한 임금 수준 또는 기준이 존재하는가?
 - (Titto Almora, Peru) 임금이 가이드라인이 있어 임금을 표준화하려는 노력이 있으며, 기관의 규모나 사업 내용 등에 따라 기준을 상이하게 두고 있음
 - (이호동 과장) 기관별로 임금수준은 다르나 임금상승률 규제하고 기관별로 상승률 차등을 두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Juan Manuel Dipp, Bolivia) 페루에서 이상적으로는 이사회가 기업 운영에 관해 자율권을 가지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사실상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데 정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는가?
 - (Titto Almora, Peru) 정치적 영향과 기업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이사회나 경영진이 기업에 피해가 가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됨. 이는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음. 따라서 결정권자는 자금 지원과 자금 원천을 투명하게 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개인의 책임하에 내리게 됨 [뉴스레터]



International SOE Policy Conference 2세션 part 2

Session II part 1에 이어 part 2에서는 IDB, 칠레, 브라질 대표의 발제가 있었는데, IDB는 중남미 카리브 국가에서의 공공기관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칠레는 공공기관의 지주회사 격인 SEP이란 기관을 소개하였고, 브라질은 리우데자네이루의 공공기관과 구조조정 과정을 설명하였다. 발제 이후에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코멘트가 이루어졌다.

- 일 시 : 2013년 11월 6일(수) 16:00 ~ 18:00
- 주 제 : SOE GOVERNANCE : STRUCTURE & OVERSIGHT (part 2)
- 발제자 : Jorge Kaufmann (IDB), Orlando Charcra (Chile), Francisco Caldas (Brazil), Ann Marie Rhoden (사회자, Jamaica)

발제 1

Jorge Kaufmann 미주개발은행(IDB)

- 미주개발은행(IDB)는 브라질, 칠레, 페루,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등 중남미 카리브 국가에서의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고찰
- (공공기관 변천) 중남미 카리브해 국가에서 공공기관은 1930년대~1980년대에 산업화 정책의 지원도구로서 경제 참여도가 매우 높았으나 1990년대에는 재정적자,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이유로 민영화가 많이 이루어졌음
 - 2000년 이후에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 역할의 고찰과 민영화 실패 등이 영향을 주어 공공기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점차 커지고 있음
- (공공기관의 중요성) 중남미 카리브 국가에서 공공기관은 공공가치를 실현하는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기업 지배구조 및 법령의 예시로 역할해야 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 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국가적 이익 활동을 수행해야 함
-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 중남미에서는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은 국가마다 그 방식이 다르지만 민간 출자, 중앙집권적 감독기구 설립, 내부구조(이사회나 경영자) 개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소유권과 국가적 기능 수행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체

계를 구축하고, 이사회 결정에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 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제

- (향후 과제 및 교훈) 기업 지배구조 최적화,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 경영효율화, 사업모니터링 등의 과제를 함께 인지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

발제 2

[칠레] Orlando Charcra 공기기업관리국(SEP)

- (공공기관 변천) 1970년대 칠레에는 매우 많은 공기기업이 존재하였으며 대부분 주무부처의 정책을 돕는 기능을 수행하였고, 1980년대~1990년대에는 공공기관에 대해 중앙정부의 감독과 주무부처의 감독을 동시에 받는 듀얼모델을 구축하고 민영화가 추진되기도 하였음
 - 현재는 중앙집권적 모델을 구축하여 중앙정부가 기관의 성과 점검, 기업지배구조 관련 매뉴얼 작성, 이사회·감사위원회의 기능 및 요건 제시, 기업 내부적인 리스크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공기기업의 지주회사 격인 SEP(State-owned Enterprises System)이 설립되어 22개 공기기업의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기관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기능을 평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관 운영을 감독하고 있음
 - SEP은 공기기업과 관계부처의 의견조율, 채무 가이드라인 제시, 기관에 관련한 외부 협상(예를 들면 기관 시설에 대한 보험 협상), 예산편성, 기업의 목표 설정, 임금집행 가이드라인 제시, 투자 계획의 타당성 평가, 사업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함
 - 공공기관 현대화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OECD 권고에 따라 공공서비스위원회 설립을 준비 중


발제 3

[브라질] Francisco Caldas 계획관리부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는 14개의 공기기업과 1개의 투자은행이 존재하며 이는 국영기업 또는 혼합자본기업 형태로서 기업들은 일정수준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관리하여야 하고 외부의 감사를 받게 됨
 - 구조조정 과정을 겪으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였는데 이 중 2개 기관만이 정부의 재정지원으로부터 완전 독립

- 지배구조 개혁은 다음의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졌으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과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가능하도록 설계
 - 첫째, 모든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기관의 최적의 기능적 역량이 무엇인가를 고려
 - 둘째, 경영계약으로써 기업들이 주정부와 계약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때 목표나 지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달성시 예산확보 용이
 - 셋째,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외부 감사 체계, 새로운 회계 기준 등

■ Q&A 세션

- (Orlando Charcra, Chile) 칠레 SEP는 민간이 아닌 정부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규모는 30인 정도로 구성되어 있음
- (Francisco Caldas, Brazil) 브라질 공공기관의 위험관리는 정부와 기관의 계약사항에 구체적인 범위는 정하지 않고 있지만 리스크 관리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관리될 수 있음
- (Orlando Charcra, Chile) 칠레 공공기관의 위험관리는 SEP가 제시하는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명문화하고 있음(부정부패, 방만 경영 등의 리스크, 이사들의 근무기간 등) 



International SOE Policy Conference 3세션

Session III에서는 「공공기관 사업 성과관리」라는 주제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국 대표의 발제가 있었으며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아르헨티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CIPPEC의 공공기관 정보공개 노력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브라질은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감독체계에 대해 설명하였고, 한국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일 시 : 2013년 11월 7일(목) 09:00 ~ 10:40
- 주 제 : SOE BUSINESS PERFORMANCE MONITORING & MANAGEMENT
- 발제자 : Maria Page (Argentina), Murilo Francisco Barella (Brazil),
허경선(한국조세재정연구원), Regoberto Romero (사회자, Honduras)
- 지정토론 : 박정수(이화여자대학교)

발제 1

[아르헨티나] Maria Page 공공정책센터(CIPPEC)

- 아르헨티나 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사업활동 등 정보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있으나 관련법이 존재하지 않고 다만 행정령이 2003년부터 발효되어 있음
 - 참고로 아르헨티나 공기업은 100% 국가가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와 주식회사 형태이면서 국가가 대주주인 경우로 나누고 있음
- 이에 민간 비영리단체인 CIPPEC은 공기업정보공개와 투명성평가 관련 분석틀(감사·조달·윤리강령·인사관리·투명성강화 등 9개 측면)을 제시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령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특히, 전기전력, 운송 등 전략사업 부문의 14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 웹사이트 등에 공시되어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중임
 - 하지만 아르헨티나에서 공공기관의 투명성 관련한 정보공시는 일반적인 관행은 아니며 정보요청에 대해 기업 담당자는 물론 정부부처 담당자도 수용적이지 못하여 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존재
 - 또한 기업마다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정보의 수준이 다르며 재무 관련 정보는 공개를 특히 꺼리고 있어 부채관련 분석이 어려움

발제 2

[브라질] Murilo Francisco Barella 공공기관연방정부

- 브라질에는 총 151개의 공공기관이 존재하는데 이들 기관은 기획예산부(Ministry of Planning),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감독당국(Supervising Ministry)과 관계를 맺고 있음
 - 이 중 46개 기관에 대해서는 법적인 자치를 보장하면서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임
- 특히 기획예산부의 공기업조정지배구조부(the Department of Coordination and Governance of State Enterprises; DEST)는 공공기관을 통한 사회 이익 실현을 위해 정부 투자를 증진시키고, 이로써 이해관계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미션으로 설치되었음
 - DEST는 투자예산평가·부채 정책 등 예산 관련, 경제 데이터·대차대조표·모니터링·사업평가 등 정보공개 관련, 기업 지배구조·이해관계자 관리 등 사회관련, 마지막으로 인적 관리 측면 등에 관여하고 있음
 - 모니터링·평가 시스템은 기본 프로파일, 재무제표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대출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자금의 출처 및 지역 구분 등을 살펴봄), 고정자산투자과 관련하여 연·월 단위로 평가, 성과·인력·투자 등의 자료를 포함하는 홀로그램 등으로 구성
 - 평가는 이사회에서 수행하며, 기관에서 공시한 정보와 DEST에서 발표한 계획 등을 종합하여 의사결정함
 - 평가결과는 기관의 지속가능성, 개혁, 내부 프로세스, 주주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것이며 이때 BSC(Balance score card)를 이용하기도 함


발제 3

[한국]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공공기관 지정과 관리) 한국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295개의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각각의 기준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1984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특히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은 행정부의 직접 감독(경영평가), 공공기관 내부지배구조, 국민·언론에 의한 감시의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짐
- (경영평가 개요) 1984년 시작한 경영평가는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준정부기관까지로 확대되었는데 기관의 분류에 따라 평가지표나 가중치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평가단을 매년 조직하고 있음

- 경영평가는 비계량평가와 계량평가가 있으며 리더십 · 책임경영, 사업효율성, 주요사업 범주에서 이루어짐
-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의 성과급, 인사 측면에서 인센티브가 있으며, 평가가 저조할 경우 기관장의 해임이 권고되는 패널티가 있음

Q&A 세션

- (Elvio Brizuela, Paraguay) 한국의 경영평가 기준을 현실화하고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 (허경선 박사) 평가를 위한 준비 작업은 1년 내내 이루어지며 평가지표 개발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음. 적절한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고, 재무적인 계량평가와 더불어 기관의 주요사업을 적절하게 평가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가를 위한 목표 설정이 중요
- (Roberto Garcia Lopez, IDB) 기관을 평가함에 있어 성과개선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Shadow company 라는 것을 설정, shadow company 방법론은 그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최고의 기업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인데 한국에도 이러한 방식이 존재하는가?
 - (허경선 박사) 한국에서도 최근 shadow company와 비슷한 기준을 적용, 평가에 도입하고 있음
- (Elvio Brizuela, Paraguay) 한국의 경영평가단 규모가 매우 크다고 생각되는데 평가단 구성의 요건이 명확한가?
 - (허경선 박사) 평가단 요건은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표별 전문가로 구성됨. 또한 평가단은 매년 그 규모가 다르고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단 구성에도 신경 쓰고 있음
- (박정수 교수) 민간 비영리기관인 CIEPPEC의 예산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 (Maria Page, Argentina) 1/3은 국제협기구기금, 1/3은 개인 · 기업 기부금, 나머지 1/3은 정부의 기술지원사업 과제로 따온 금액임. 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을 특정 정당과 유착하지 않도록 노력 



International SOE Policy Conference 4세션

Session IV에서는 「공공기관 재정위험 및 부채관리」라는 주제로 IDB, 우루과이, 한국 대표의 발제가 있었으며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IDB는 중남미 카리브해 국가들의 재정위험의 원인과 과제를 고찰하였으며, 우루과이는 경제재무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에서 공공기관의 재정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였고, 한국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문제를 대표 기관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 일 시 : 2013년 11월 7일(목) 11:00 ~ 12:30
- 주 제 : SOE FISCAL RISK & DEBT MANAGEMENT
- 발제자 : Roberto Garcia Lopez (IDB), Fernanda D'áz (Uruguay),
최준욱(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황성현(사회자, 전 한국조세연구원장)

발제 1

Roberto Garcia Lopez 미주개발은행(IDB)

- IDB는 중남미 카리브해 국가의 공공기관을 관찰하여 그들의 재정위험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는데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에 문제점이 발견됨
 - 중남미 석유기업들은 국제유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는 중남미 국가의 공공기관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
 - 기업경영에 정책개입 과도, 연료소비에 대한 보조금 과도, 공공서비스 요금이 보조금에 의존, 투자가 부채에 의존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음
 - 과거 카리브해 국가들은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추진했는데 그 당시 민영화의 영향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고 평가도 미비했으며 따라서 규제에 어려움이 있었음
- 이들 국가에서 공공기관은 국가와 지방정부에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가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는 역할이 미진함
 - 공공기관은 지방정부에 상수도, 전기, 가스 등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카리브해 국가들에서 광물자원 등의 부존자원은 모두 국가의 소유로서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모두 공공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
 - 카리브해 국가에서 원유·에너지 관련 공공기업이 국가 전체 매출의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GDP에 미치는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ROA 비율이 낮으면 이익창출 여력이 낮은 것으로 보고 국고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가정, 기관들을 분석한 결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폭이 커지면 기관의 ROA, ROE가 낮아져서 이로 인해 국가 재정 변동폭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카리브해 국가의 공공기관들은 원자재가격 충격, 낮은 공공서비스요금과 과도한 보조금, 높은 임금수준, 인력과잉, 우발성 채무, 지배구조 감독문제 등으로 인해 재정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되었으며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과제

발제 2


[우루과이] Fernanda Díaz 경제재무부

- 우루과이 공기업은 정부가 자본을 100% 지원하는 경우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경우로 분류되며 이러한 공기업은 재무부의 통제를 받게 됨
 - 우루과이에는 정유기업인 ANCAP, 통신기업인 ANTEL, 전력송배전 및 발전회사인 UTE, 상하수도사업을 하는 OSE 및 항공·항만·철도 관련 공공기관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현재 모두 적자를 내고 있음
 - 정부 계획 및 국정 틀과 연동하여 공기업이 운영되는데 거시경제 시나리오 측면에서 국가재정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부채수준이나 목표를 재무부에서 제시하게 됨(투자 5개년 계획, 지출정책, 임금정책, 이전지출이나 보조금 등)
 - 기관은 재무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예산기획실에서 분석하여 재무부의 승인을 받게 되며, 국가 차원에서 기관의 지출과 부채를 관리하고 목표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자금조달은 재무 계획에 포함되어 분석되는데 재무부 부채관리과(the Debts Offi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에서 고려·승인함
 - 공공기관의 적자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UTE의 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에너지 안정화 기금(Fund for Energy Stabilization:FES) 등

발제 3

[한국]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의 공공기관 부채는 최근 3~4년 사이에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이슈는 첫째, 이러한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 부채의 한 형태인가, 둘째, 부채 증가로 인해 어떠한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는가, 셋째, 증가 원인이 무엇인가 등임

- 한국의 부채증가는 LH, KEPCO, KOGAS, KORAIL, KEC, K-water 등 몇몇 공기업에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관의 부채 증가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 연구가 계속 진행중임
 - 부채 증가 원인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낮은 요금, 과도한 시설 투자, 정부 추진 사업(주택지원사업, 4대강 개발사업, 해외투자사업) 등이 있음
 - 부채 증가는 정부 정책, 금융규제, 외부 경제환경 변화, 신규투자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중 기관과 사회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과 그렇지 않은 요인을 가릴 필요가 있음 



International SOE Policy Conference 5세션

Session V에서는 「민영화와 경쟁 : 전략과 사례」라는 주제에 대해 멕시코, 도미니카 공화국, 한국 대표의 발제가 있었으며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멕시코는 자산관리청(SAE)의 기능 및 민영화사례를 소개하였고, 도미니카는 공기업의 역사적 특징과 1997년, 2001년 민영화사례를 소개하였다. 한국은 민영화의 필요성과 한국의 사례, 민영화 전략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후 객체기 교수와 김성진 제도기획과 과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으며 국가별 발표에 대한 Q&A 세션에서는 민영화에 관한 다양한 질문이 있었다.

- 일 시 : 2013년 11월 7일(목) 14:00 ~ 17:00
- 주 제 : Privatization and Competition in the market : Strategies and Cases
- 발제자 : Rodrigo Garza (Mexico), Isidoro Santana (Dominican Republic),
박 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송대희(사회자, 전 한국조세연구원장)
- 지정토론 : 객체기 교수(동국대학교), 김성진 과장(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발제 1

[멕시코] Rodrigo Garza 자산관리처분청(SAE)

- (기능과 지배구조) 2003년 출범한 SAE는 국자자산 처분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ex: 부실기업의 해산, 정리, 폐업)하는 기관으로서 재무부의 통제를 받고 있음
- (민영화의 사례와 교훈) 수많은 민영화 사례를 통해 성공적 민영화를 위해서는 민영화 대상 기업의 고유한 특징 및 과정의 복잡성에 대한 심도 깊은 고려가 필요하여 이를 통한 전략적 계획 수립 및 제도적(법률, 성과평가 등) 뒷받침이 필요함을 인식
 - 정치적 상황에 좌우되던 민영화 과정에 대한 전환을 시도
 - 기존의 경우 소유권 규정 불명확으로 지배구조조정 및 민영화 실패
 - 국가개발계획과의 연동을 통한 프로그램 실행방식으로 전환, 업무별 지표에 따라 사업 전반에 대해 평가시스템 활용 중
 - 부실화로 인해 국가 재정 과탄의 원인을 제공하던 전력공사 민영화(45,000명 해고)를 통해 전략적 계획 및 정보공시(투명성 제고)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얻음
 - 또한 민영화 과정의 표준화(법제화)가 담보되어야 투명성 확보 및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

발제 2

[도미니카] Isidoro Santana

- (역사적 특징) 대부분의 공공기관 및 경제기관이 독재정권의 유산(중남미의 공통적 특징)으로 국가 전략적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취약성(낮은 투명성, 비효율 경영, 자산관리실패)으로 인해 민영화를 통한 구조조정 및 수익률 제고 시도
- (1997년 민영화) 중남미 민영화 물결에 따라 공기업 자본화법이 제정되어 일부 자산에 대한 민간투자 허용(파트너 참여, 지분 50%까지)
 - 경쟁 노출을 통해 지속적 손실로 인한 부채 누적을 방지하고 수익성 증진을 목표로 함
 - 성공적인 민영화로 평가되는 사례 (2개 화력, 3개 배전 공사 및 항만·공항)도 존재하나 실패사례(컨세션방식의 도로의 경우 1억 7천만달러 손실, 정부가 손실부담)도 다수 존재함
- (2001년 민영화) 정부는 민영화기업으로부터 배당수익(10년간 2억 8천만달러)을 거두었으나 이 외 민영화 기업(전력분야 등)에서는 실패를 거듭
 - 정부는 민영화 기업 배당관리, 계약준수 여부 감사, 공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관리 및 사회 환원을 위해 공기업 자본펀드(기금, endowment fund)를 설립
 - 전력공사의 경우 민영화 이후 높은 발전단가 및 효율성 저하 등의 이유로 12억달러의 손실을 내고 다시 국유화 됨(손실을 정부지원금으로 보전함에 따라 기업효율화 노력 부족)

발제 3

[한국] 박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 (민영화의 필요성) 민영화는 공기업 문제(정부, 기관장, 노동조합, 국민의 담합을 통한 비효율, 부채발생 등) 해결 및 더 나은 성과 달성의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음
 - 민영화는 경성제약조건(hard budget constraint), 경쟁도입, 정부 간여 배제를 통해 효율성 및 서비스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기회 제공
 - 다만 민영화가 모든 문제해결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므로 산업별로 면밀한 검토 필요
- (한국의 민영화) 6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민영화는 5단계 (1998년, 외환위기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기업 및 자회사 규모 감축 및 수익률과 재무성과 개선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됨


- (민영화의 전략) 민영화는 쉽지 않은 과정이므로 개혁추진자, 이해관계자, 개혁과정에 따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지정토론

- (곽채기 교수) 멕시코, 도미니카 민영화는(재국유화 사례 등) 흥미로운 사례이며 각국의 민영화 사례로부터의 교훈과 이로부터 미래전략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자리였음
 - 멕시코와 도미니카의 민영화는 각 국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사례로서 특수성을 고려한 추진 전략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계기
 - 민영화 사례로부터 민영화에는 우선순위가 존재하며 민영화 유형 및 방식(최근 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체제)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음
 - 민영화 전략 ①대상선택, ②요금정책, ③정치적 요인에 대한 고려, ④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
- (김성진 과장) 한국의 경우 소개된 사례와 다른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위기가 존재하였으며 도미니카 공화국 사례로부터 제도화의 중요성 인식
 - 한국은 외환위기로 인한 위기의식하에 공기업 민영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임
 - 도미니카의 전력산업 민영화 사례로부터 제도를 잘 마련하는 것이 민영화 성공 여부와 직결된다는 교훈을 얻음
 - 멕시코 전력공사 민영화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저항 극복 등의 과정과 민영화 결과에 대한 궁금증이 존재함

Q&A 세션

- 민영화 이전과 이후의 관리방식, 효율적 민영화 추진 방법, 민영화 이후 가격규제 및 공적역할의 가능성, 민영화의 지속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질의
 - (멕시코) 민영화의 성공요인은 전력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대응, 노조와의 인식공유 그리고 법제도화(적절한 피해보상의 시행 등)에 있다고 생각함
 - (도미니카) 민영화에 대한 저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틀을 구성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도미니카의 경우 민영화를 위한 제도적 구축이 미비하였고 민영화 전·후 전략을 실행하는 힘이 충분치 못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한국) 민영화는 그 자체가 정책적 목적이 아니며 경쟁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더 중요, 규제설계를 통해 민영화 이후에도 공적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편 집

이원희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편집 총괄)

김종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실무 총괄)

유승현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이슈 & Talk)

유재민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전문가의 눈 / 좋은 사례 나누기)

나진희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기관장 인터뷰)

송신형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현장의 소리)

※ 「KIPF 공공기관 뉴스레터」의 모든 콘텐츠는 공공기관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soe.kipf.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02-2186-2362)

KIPF 공공기관 뉴스레터 2014.1 (Vol.3)

2014년 1월 21일 인쇄

2014년 1월 28일 발행

발행인 옥동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대로 28길 28

TEL : 2186-2114(대표), <http://seo.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인 쇄 삼신인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